

2003 연구보고서 260-8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백영주**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혜경** (연구위원)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이 정보기반 운영체제를 갖춘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성 관련 분야에서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체제를 만들고 전문영역별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성정보화사업은 여성정책차원에서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따라 추진되기 보다는 산발적인 지원사업형태로 수행된 관계로 여성정보화가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여성정책과 연계시키는 과정에서도 기대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여성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기반 운영체제로서 여성정책 담당자간에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여성정책정보자원의 흐름을 분석하고 여성정책담당자간의 정보 전달체계를 파악하여 국가의 여성정책정보가 공유되고 교류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여성정책의 현황파악, 분석, 평가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첫째, 여성정책담당 기관의 정보교류가 활성화되고, 둘째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여성정책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셋째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게 되며, 넷째 유관부서간의 협력체계가 강화됨으로 인해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한 축으로서 여성정책 담당자들 간의 정보공유와 유통에 중점을 두어 수행되었지만 앞으로는 대상범위를 여성관련 연구기관, 단체, 개인까지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의 자문과 평가에 참여하여 연구의 방향을 잡고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신 원내외 선생님들 그리고 심층면접과 설문조사에 기꺼이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 장 장 하 진

연구요약

1. 연구 목적 및 내용

가.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담당조직의 정보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정보자원의 소재 및 흐름을 분석하며 정보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국가의 여성정책정보가 공유되고 교류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효과적으로 여성정책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여성정책담당자 간의 정보전달체계를 확립해 보고, 둘째, 여성정책의 현황 파악 및 분석, 평가가 실 시간으로 가능한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며, 셋째,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 1) 여성정책정보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
- 2) 여성정책 정보전달체계 및 수행 업무 분석
- 3)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모형 및 개발방안 제시

다.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 2) 설문조사

◆ 조사대상: 중앙의 여성부와 6개 중앙행정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여성정책담당자 19명,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공무원 46명,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176명(총 241명)

◆ 조사기간: 2003년 7월 21일부터 9월 5일

◆ 조사내용: 여성정책업무내용,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 현황, 여성정책 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

- 3) 심층면접

- ◆ 조사대상: 여성부와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 그리고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 책임자, 유관부처의 지식정보시스템 운영자

- ◆ 조사기간: 2003년 8월 1일부터 9월 20일

- ◆ 조사내용: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여성정책 전달체계,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시 고려 사항

- 4) 국내외 정책정보시스템 사례분석

- 5) 전문가 자문

2. 여성정책정보화의 개념

여성정책정보화를 ‘여성정책관련 욕구의 정보화’, ‘여성대상 서비스의 정보화’, ‘여성정책 자원의 정보화’, ‘여성관련 지식의 정보화’, ‘여성대상 행정관리의 정보화’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여성정책 정보화를 통하여 여성정책관련 기관의 업무가 표준화되면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고 대국민 서비스도 제고될 것이다.

3. 지식관리시스템

지식관리라는 개념은 지식경영이라는 개념으로 민간부문에서 먼저 도입된 것이다.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은 조직 내·외부의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조직구성원이나 조직 전체 차원의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이 내·외부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측면이 현재의 KMS와 유사하다.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지식의 공동활용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KMS의 지식경영기법을 여성정책정보에 적용하였다.

4.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업무의 내용과 여성정책정보의 수집현황, 여성정책업무 관련 인터넷활용현황, 여성정책정보의 관리와 공유현황,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

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기대, 얻고자하는 정보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여성정책관련 행정기관간의 정보교류가 어렵고, 여성정책추진체계가 비효율적이며, 여성정책정보와 관련하여 지역간 격차를 보이고 있는 등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책업무의 결과가 지식정보로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정책담당자들의 많은 경우가 '선행업무의 진행방식과 결과를 참조하여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정보가 폐기되어 정보수집이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현행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정보가 지식정보로 축적되어 새로운 정책형성이나 집행과정에 반영되도록 개발함으로써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정책정보의 내용을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여성정책업무의 수행에 있어 질 높은 정책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수집에 있어 온라인에 의존하는 비율이 큰 지방자치단체나 시·군·구의 여성정책 담당자들이 필요한 여성정책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할 수 있다면 중앙과 지방간의 여성정책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도 해소될 것이다.

셋째, 여성정책정보의 공유와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여성정책업무수행에서의 문제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처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 파악이 어렵고, 부처간의 정보교류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실정에 대한 정보부재로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는 중앙위주의 여성정책과제가 하달되는 문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파악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기술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정보제공 웹 사이트의 운영이나 관리를 업무담당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여성정책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새로이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인력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필요한 조건이나 이번 조사에서 반수 정도만이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제시한 활용가능성을 정리해 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이 첫째,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부처별, 기관별로 실시간 평가가 가능할 것, 둘째, 각 행정기관간의 의견수렴의 창구 역할을 할 것, 셋째, 지방의 여성정책 동향 파악이 가능할 것, 넷째, 체계적인 정보 수집시스템으로서 기능할 것, 다섯째, 공무원간 네트워크화가 가능할 것 등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승진이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 등을 기대하였다.

5. 사례 분석

노동부와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사례에서, 농림 KMS의 활성화 방안 중에서는, 지자체 농정담당 공무원들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위해 지자체 농정공무원에게 KMS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관련 업무지원 코너 신설 등이 들어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업무의 지식공유를 유도하고 특히 지자체와의 연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국 도·시·군과도 연동하려는 계획은 여성정책의 유기적 협조체계구축을 위하여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의 경우는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또한 인센티브 없이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기에 한계가 있을 것임이 명백하다. 별도의 법·제도적인 강제성이나 금전적, 물질적인 포상 및 정신적 보상의 측면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내실 있는 지식관리체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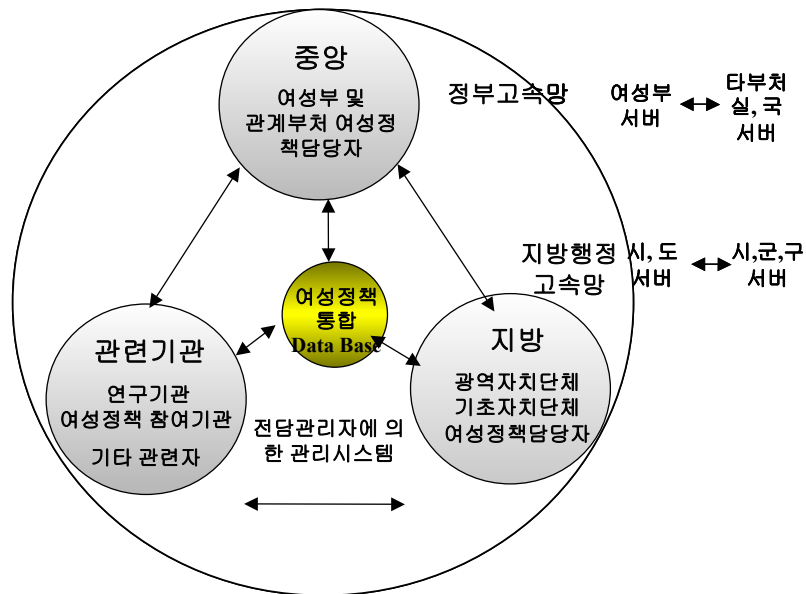
국내사례로 제시된 농림부나 노동부의 경우는 각각 전국적으로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어 KMS의 운영이 원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여성정책정보의 전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정보가 생산되는

곳이 중앙의 여성부나 여성정책담당관실, 지방의 여성정책과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확장된 여성정책정보의 전달시스템 구축이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외국의 사례로서 호주의 여성정책네트워크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축, 정부·비정부 조직간의 네트워크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밖에 아직은 링크의 기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지만 뉴질랜드와 같은 이웃 국가와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정책담당자간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여성정책정보에 대한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 나아가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지역의 국가간 네트워크에 관해서도 향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방향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운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여성부와 관련부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을 연결하는 여성정책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중앙에는 여성정책 통합DB관리시스템이 존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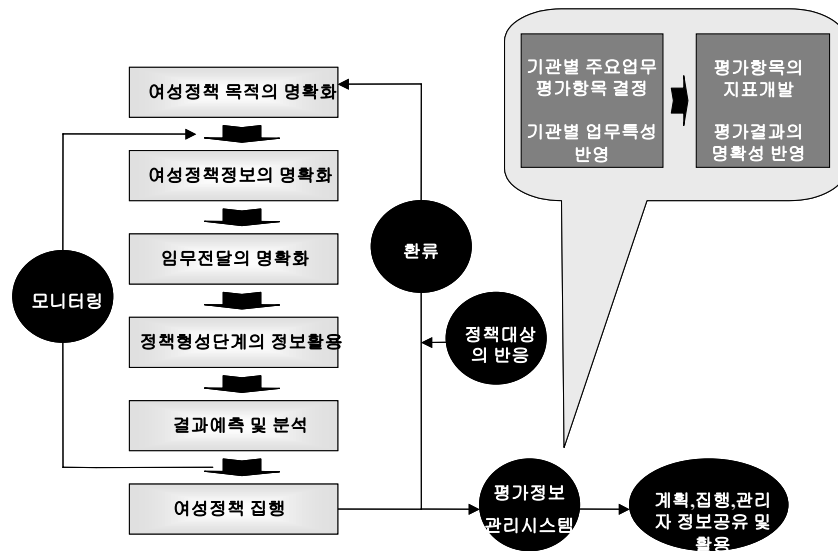


[그림 1]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네트워크의 각 주체는 정보의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정보의 활용자로서의 역할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각 주체 간의 정보의 통로는 기존의 정부고속망과 지방행정고속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여성정책 담당자는 해당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정책정보의 분류를 통하여 임무를 세분화하고 임무의 전달과정을 분명히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형성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네트워크 안에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환류시켜 그 결과를 다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별도의 평가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여성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



여성정책 평가정보 관리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정책평가정보를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간, 기관간에 공동 활용하는 데 있다. 특히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여성정책 평가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여성정책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발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부서간의 연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정책정보의 영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정책정보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관련 정보로서, 여성부와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업무추진계획 등 각종 문서(전자문서 포함), 예산·결산·기금정보, 업무경험지식, 사례, 각종 통계 등의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여성정책 업무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여성정책업무에 대한 표준분류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신청, 신고, 제출 방식의 전자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통업무 처리절차가 간소화, 표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통양식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 코드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넷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은 정책관련 정보를 담당자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수집하는 데 효율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 여성부에서 추진할 경우 일반회계예산, 정보화촉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 중 일반회계예산과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회계나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단계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되어야 지원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ISP의 우선과제로서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한다.

여섯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및 조직이 필요하다. 여성정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여성부에 시스템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스템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관간의 정보연계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가칭: 여성정책정보공동이용기관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여성정책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성정책 평가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여성정책정보 전달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환류시키는 전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 례

제 I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가. 여성정책정보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	4
나. 여성정책 정보전달체계 및 수행 업무 분석	4
다.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모형 및 개발방안 제시	4
3. 연구방법	5
가. 문헌연구	5
나. 설문조사	5
다. 여성정책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7
라. 국내외의 정책정보전달시스템의 사례분석	8
4. 연구의 제한점	8
제 II 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여성정책과 여성정보화	11
1. 여성정책의 개념 및 추진체계	11
가. 여성정책의 기본개념	11
나. 여성정책의 특수성	11
다. 여성정책관련 기구 및 조직	12
라.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14
마.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	14
2. 여성정보화 및 여성정책정보화	17
가. 여성정보화	17
나. 여성정책정보화	19
제2절 전자정부와 지식정보화	21
1. 전자정부의 개념	21

2. 기존의 정부와 전자정부의 차이점	24
3. 전자정부 구현의 문제점과 구현방향	26
제3절 정보화 전략계획과 지식관리	31
1. 여성정보화 전략계획(ISP)	31
2. 지식관리시스템(KMS)	34
가. KMS의 개념과 성격	34
나. KMS의 추진전략	36
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식관리시스템	38
3.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	41
가.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41
나.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특성	42
다. 정책정보종합시스템의 내용	43
제4절 시사점	46

제Ⅲ장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 분석	49
제1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 현황	51
1. 여성정책업무의 내용	51
2. 여성정책업무 수행환경	54
가. 여성정책업무의 수행과정	55
나. 여성정책업무수행의 장애요인	57
다. 여성정책정보관련 웹 사이트 운영현황	59
3. 여성정책정보 수집현황	62
가. 여성정책정보수집의 용이성	62
나. 여성정책정보의 획득경로	63
다. 온라인상의 여성정책정보소스	66
4. 여성정책업무관련 인터넷활용 현황	68
가. 여성정책정보의 제공여부	68
나. 여성정책업무관련 인터넷활용 현황	69
제2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	75

1. 여성정책정보의 공유현황	75
2. 여성정책정보의 관리	77
3.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78
4.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	79
5.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에 대한 기대	84
6. 시사점	86

제Ⅳ장. 사례분석 89

제1절 국내사례	91
1. 농림부	91
가.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의 개념	91
나. 현황	92
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2. 노동부	101
가. 노동부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념	101
나. 현황	101
다. 지식활동 우수자 선정계획	103
3. 시사점	105
제2절 국외사례	106
1. 호주의 여성정책정보 네트워크	106
2. 호주의 여성네트워크	108
3. 호주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110
4. 시사점	113

제Ⅴ장.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방향 115

제1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모형	117
1.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	117
2.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전략	119
3.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모형 및 활용방안	121

제2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방안	124
1. 법·제도적 기반 마련	124
2. 여성정책정보의 명확화	125
3. 여성정책업무의 표준화	126
4. 실시간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127
5.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 확충	128
6.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의 구성	129
7. 평가체계 확립	130
제Ⅵ장. 결론	133
참고문헌	141
부 록	145
부록 1. 16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제 현황	147
부록 2.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설문지	161

표 차례

<표 1-1> 응답자 특성	6
<표 1-2> 설문조사 내용	7
<표 1-3> 심층면접 내용	7
<표 2-1> 여성정책 추진 조직 현황	13
<표 2-2> 기존의 정부구조와 전자정부구조와의 비교	25
<표 2-3> 기존 행정정보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의 비교	36
<표 3-1> 여성부의 주요업무	52
<표 3-2>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주요업무	53
<표 4-1> 포상금	105
<표 4-2> 주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	112
<표 4-3>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	112

그림 차례

[그림 2-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기본구조	15
[그림 2-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체계	16
[그림 2-3] 여성정책정보화의 모형	19
[그림 2-4] 전자정부의 포트폴리오	25
[그림 2-5] Stove-pipe 구조	27
[그림 2-6] 여성정보화전략계획(ISP)의 추진목표	32
[그림 2-7] 정보화 전략계획의 과정	33
[그림 2-8] 행정자치부의 담당구조	40
[그림 2-9] 정부지식관리센터 개념도	40
[그림 2-10]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개념도	42
[그림 3-1] 여성업무의 결정방식	55

[그림 3-2] 사업기획(안)의 결정까지의 수정횟수(전체)	56
[그림 3-3] 여성정책업무의 장애요인(1순위 선택)	58
[그림 3-4] 여성정책업무의 장애요인(2순위 선택)	58
[그림 3-5] 여성정책업무의 장애요인(3순위 선택)	59
[그림 3-6] 별도의 웹 사이트 운영여부	60
[그림 3-7] 별도의 웹 사이트 운영여부(지역별 비교)	60
[그림 3-8] 별도의 웹 사이트 관리	61
[그림 3-9] 정보수집의 용이성	62
[그림 3-10] 정보수집의 용이성(지역별 비교)	63
[그림 3-11] 여성정책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경로	64
[그림 3-12] 여성정책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경로(지역별 비교)	65
[그림 3-13] 여성정책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경로(지역별 비교)	66
[그림 3-14]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의 정보소스(1순위 선택)	67
[그림 3-15]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의 정보소스(2순위 선택)	67
[그림 3-16] 여성정책정보의 제공여부	68
[그림 3-17] 온라인상 문의에 대한 응답정도	69
[그림 3-18] 온라인상 문의에 대한 응답정도(지역별 비교)	70
[그림 3-19] 온라인상 문의에 대한 응답의 기간	70
[그림 3-20] 온라인상 문의에 대한 응답의 기간(지역별 비교)	71
[그림 3-21] 온라인상 제시된 의견의 업무반영정도	72
[그림 3-22] 온라인상 제시된 의견의 업무반영정도(지역별 비교)	72
[그림 3-23] 인터넷 이용 횟수	73
[그림 3-24] 인터넷 이용 횟수(지역별 비교)	73
[그림 3-25] 온라인 상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74
[그림 3-26]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지역별 비교)	74
[그림 3-27] 다른 행정기관과의 정보의 공유 정도	76
[그림 3-28] 다른 행정기관과의 정보의 공유 정도(지역별 비교)	76
[그림 3-29] 여성정책업무 수행결과 처리	77
[그림 3-30] 여성정책업무 수행결과 처리(지역별 비교)	78

[그림 3-31]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	79
[그림 3-32]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지역별 비교)	79
[그림 3-33] 문서정보의 필요성	80
[그림 3-34] 간행물정보의 필요성	80
[그림 3-35] 동향정보의 필요성	81
[그림 3-36] 참고정보의 필요성	81
[그림 3-37] 공문양식정보의 필요성	82
[그림 3-38] 업무관련 경험지식정보의 필요성	82
[그림 3-39] 얻고자 하는 정보의 지역별 비교	83
[그림 3-40]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에 대한 기대정보	85
[그림 3-41]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에 대한 기대정보(지역별 비교)	85
[그림 4-1] 농림부 KMS 사업단계	92
[그림 4-2] 농림부 KMS 활용분석 1(지식등록 누적건수 2003년 1월 현재) ·	93
[그림 4-3] 농림부 KMS 활용분석 2(2002년 기관별 접속자 누계)	94
[그림 4-4] 농림KM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5
[그림 4-5] 농림부KMS 초기화면	100
[그림 4-6] 우수지식 선정절차	104
[그림 4-7] 호주의 여성네트워크	110
[그림 4-8] 호주의 지방정부간 연계모형	111
[그림 5-1] 각 여성정책담당자간 연계적 모형	118
[그림 5-2]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전략	120
[그림 5-3]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운영 모형	122
[그림 5-4] 여성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	123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4. 연구의 제한점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사회영역에서 정보기반을 둔 운영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미래사회에서 여성정책전달체계 또한 최근의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보화 인프라의 구축과 지식정보화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하는 길목에 서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성정보화사업은 국가차원의 구심체가 될 전담조직이 없이 추진되어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장기적인 발전전략 없이 소관부처별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또한 여성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현황파악이 미흡하여 가시적인 정보화 성과 및 확산의 효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정보화는 여성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때 그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여성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체계로서 여성정책 담당자간의 여성정책정보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여성정보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의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는 중앙의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성부를 중심으로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체계는 정책형성의 단계에서부터 보고하고 평가하는 정책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일관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담당조직의 정보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정보자원의 소재 및 흐름을 분석하며 정보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국가의 여성정책정보가 공유되고 교류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효과적으로 여성정책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여성정책담당자 간의 정보전달체계를 확립해 보고, 둘째, 여성정책의 현황 파악 및 분석, 평가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며, 셋째,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정보의 전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보의 교류 및 공유를 저해하는 현재의 정보환경 및 기타 제약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가. 여성정책정보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정보교류의 현황을 분석하여 여성정책 정보관리 및 여성정책정보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정보화에 대한 논거를 정립하고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나. 여성정책 정보전달체계 및 수행 업무 분석

여성부와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업무와 이에 대한 정보인프라의 정도와 업무의 전달체계,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정책정보자원의 소재 및 흐름을 분석하고 여성정책정보의 공유와 교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다.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모형 및 개발방안 제시

여성정책의 현황파악과 분석, 평가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여성정책 정보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의 공유시스템의 모형을 제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여성정책정보의 전달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인터넷 검색을 통한 관련자료의 수집 및 외국사례의 조사, 설문조사를 통한 여성정책 담당조직 및 담당자의 정보인프라 조사, 담당자 업무분석 및 요구조사를 위한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연구방향의 설정 등으로 실시되었다.

가. 문헌연구

여성정책정보화, 전자정부와 정부의 지식관리시스템, 정책정보종합시스템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 설문조사

여성정책과 관련한 정보인프라의 활용도와 여성정책정보 운영실태, 여성정책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인식과 요구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 분		측정지표	응답자
중앙행정기관	성 별	여성	8(42.1)
		남성	11(57.9)
		총계	19(100.0)
	학 력	고졸이하	3(15.8)
		전문대졸	0(0.0)
		대학졸업	12(63.2)
		대학원졸업 이상	4(21.1)
지방자치단체	성 별	여성	17(37.0)
		남성	29(63.0)
		총계	46(100.0)
	학 력	고졸이하	9(19.6)
		전문대졸	2(4.3)
		대학졸업	28(60.9)
		대학원졸업 이상	7(15.2)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성 별	여성	160(89.90)
		남성	18(10.1)
		총계	178(100.0)
	학 력	고졸이하	40(22.6)
		전문대졸	40(22.6)
		대학졸업	86(48.6)
		대학원졸업 이상	11(6.2)
	총계		177(100.0)

설문조사는 여성정책 업무내용과 수행환경, 여성정책 통합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여성부를 비롯한 중앙행정부처 중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의 여성정책담당자 19명과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46명,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178명 등 총 243명을 대상으로 2003년 7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2> 설문조사 내용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 현황	여성정책업무의 내용	
	여성정책업무의 수행환경	여성정책업무의 수행과정
		여성정책업무수행의 장애요인
		여성정책정보관련 웹 사이트 운영현황
	여성정책정보 수집현황	여성정책정보수집의 용이성
		여성정책정보의 획득경로
		온라인상의 여성정책정보소스
	여성정책업무관련 인터넷활용 현황	여성정책정보의 제공여부
		여성정책업무관련 인터넷활용 현황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	여성정책정보의 공유현황	
	여성정책정보의 관리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에 대한 기대	

다. 여성정책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여성부,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 그리고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 책임자, 유관부처의 지식정보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여성정책 전달체계,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 소관조직 또는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여성정책정보 등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1-3> 심층면접 내용

면접대상	심층면접 내용
여성정책담당자	2003년 여성정책관련 업무내용
	현행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의 문제점(애로사항)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
	지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네트워크
정책정보화 관련 전문가	전자정부의 구현과 관련하여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구축시 고려 사항
	지식관리시스템(KMS), 전사적 자원계획(ERP),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 등과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과의 연관성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관련 이론과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라. 국내외의 정책정보전달시스템의 사례분석

유관 행정부처의 정보화 담당자를 면접하고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하여 국내외의 정보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통합적인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유사한 시스템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호주의 네트워크를 조사하여 보았고, 국내의 사례로는 조직내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해서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농림부 그리고 노동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여성정책정보의 통합적인 공유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관련 업무 정보를 어떻게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시키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 도입되었던 지식정보관리기술을 공공부문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성격을 달리 정립시키는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을 잇는 광범위한 통합시스템에 대한 개발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대상업무의 처리절차 분석과 정보화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제안되어야 하는 점에서 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제1절 여성정책과 여성정보화	11
제2절 전자정부와 지식정보화	21
제3절 정보화 전략계획과 지식관리	31
제4절 시사점	46

제1절 여성정책과 여성정보화

1. 여성정책의 개념 및 추진체계

가. 여성정책의 기본개념

현재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그 기원이 부녀행정에서 출발하였다. 그 적용대상과 사업범위는 무척 제한적이었다. 1983년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여성문제를 정책담론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녀’라는 용어가 비로소 ‘여성’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의 영향과 여성운동의 성장,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익의 신장 과정에서 여성정책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여성도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반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여성부, 2001b: 15).

나. 여성정책의 특수성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정책의 목표를 평등, 참여, 복지로 정하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전 부처에 걸쳐 수행될 제1차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여성정책이 국가 정책 전반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부 이외에 14개 부처가 여성정책을 수행하도록 부처별 과제를 분담하고 있다.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서 여성정책 관련 업무 및 담당 부서를 지정하였다. 6개 부처의 경우에는 여성정책 담당관을 설치하였다.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여 전 부처에 걸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획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여성정책의 개념과 조직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통해 부처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여성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여성정책을 남녀 모두가 관련되는 일반정책에서 성평등 정책으로 체계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여성정책이 과거의 여성특별위원회나 현재 여성부와 같은 여성특수조직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라 일반 정책의 영역과 조직을 통해서도 구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여성정책은 여성부나 여성 특수적인 정부 조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 인지적 정책 형성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정책 행정조직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중앙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성 인지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여성 대상 정책에서 성 인지적 정책으로의 여성정책의 변화요구는 성 주류화의 문제의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여성부, 2001d: 7-8).

다. 여성정책관련 기구 및 조직

여성정책은 그 특성상 여성부를 구심점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성정책관련 기구 및 조직구조를 보면, 여성부가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국 단위 조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가정복지심의관실과 노동부의 고용평등국이 있다. 45개 중앙행정기관마다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겸임하는 여성정책책임관이 있다. 그 외에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6개 부처에 과 단위의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다. 또한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여성부장관이 부의장, 그리고 부처 장관이 위원이 되는 국무총리 산하의 상설 기구인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있다. 조정회의를 통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관련 업무 및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는 국 단위 또는 과 단위에서 여성정책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과 단위나 계 또는 담당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여성정책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정책이 청소년 업무 등 다른 업무와 묶여 있기도 하다. 여성정책 추진 조직의 현황은 <표 2-1>과 같다.

여성 차별적 법과 제도적 개선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룬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이 보다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모든 여성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내에 어느 정도 통합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1〉 여성정책 추진 조직 현황

부단위 업무추진	국단위 업무추진	과단위 업무추진	부분적 업무추진
<p><여성부></p> <p>-여성정책실</p> <p>· 여성정책기획 · 조정 · 평가</p> <p>-차별개선국</p> <p>· 남녀차별개선 업무</p> <p>-권익증진국</p> <p>· 윤락행위 및 폭력 방지</p> <p>-대외협력국</p> <p>· 여성단체,국제협력 업무</p>	<p><보건복지부></p> <p>가정복지심의관</p> <p>-노인복지정책과</p> <p>· 노인복지종합</p> <p>-가정·아동복지과</p> <p>· 가정복지행정</p> <p>· 아동복지행정</p> <p><노동부></p> <p>고용평등국</p> <p>-평등정책과</p> <p>· 통계업무</p> <p>·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및 육아휴직제</p> <p>-여성고용과</p> <p>· 남여고용차별 개선</p>	<p>-여성정책담당관</p>	
		<p><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p> <p>-여성정책담당관</p> <p>· 부처내의 여성관련 정책조정</p>	<p><중앙인사위,외교부, 재경부,국방부,문광부, 정통부, 통일부, 해양부, 경찰청, 농진청, 중기청, 통계청 등 45개 중앙행정기관></p> <p>-여성정책책임관</p> <p>· 여성발전기본계획 소관사항</p> <p>· 정책의 분석 · 평가</p>
	<시 · 도> 국 · 과		
		<시 · 군 · 구> 과 · 담당	

* 자료 : 여성부(200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p.79 일부 수정.

라.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여성부가 중앙부처의 여성정책을 총괄하도록 되어있으나, 여성정책관련 중앙부처와 여성부와의 공식적인 연계체제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2002.12) 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토록 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여성정책 조정체계를 강화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의 연계는 정책과제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경기도의 예를 들면, 여성부의 발족 이전에는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계획 수립과 실적보고, 여성주간행사,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등의 9개 과제를 통하여 연계를 맺고 있었으며, 행정자치부와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직장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제 등 7개 과제를 통하여 연계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는 저소득가정 지원, 미혼모시설 운영, 여성회관 운영 등 14개 과제, 노동부와는 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아래 여성채용박람회 개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부와는 여성농어민참여확대 업무 등을 통하여 연계하고 있으나 법무부나 교육부 등 기타 부처들과는 직접적인 연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주, 2000: 112-118; 여성부, 2001c: 80에서 재인용) 실질적인 업무관계를 보면 보건복지부와의 연계가 가장 많았다.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정책기구도 소관업무도 다양하고 여성정책관련 외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담당기구와 여성정책업무가 시·도 마다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 직접적인 연계를 맺지 않고 있으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적을 광역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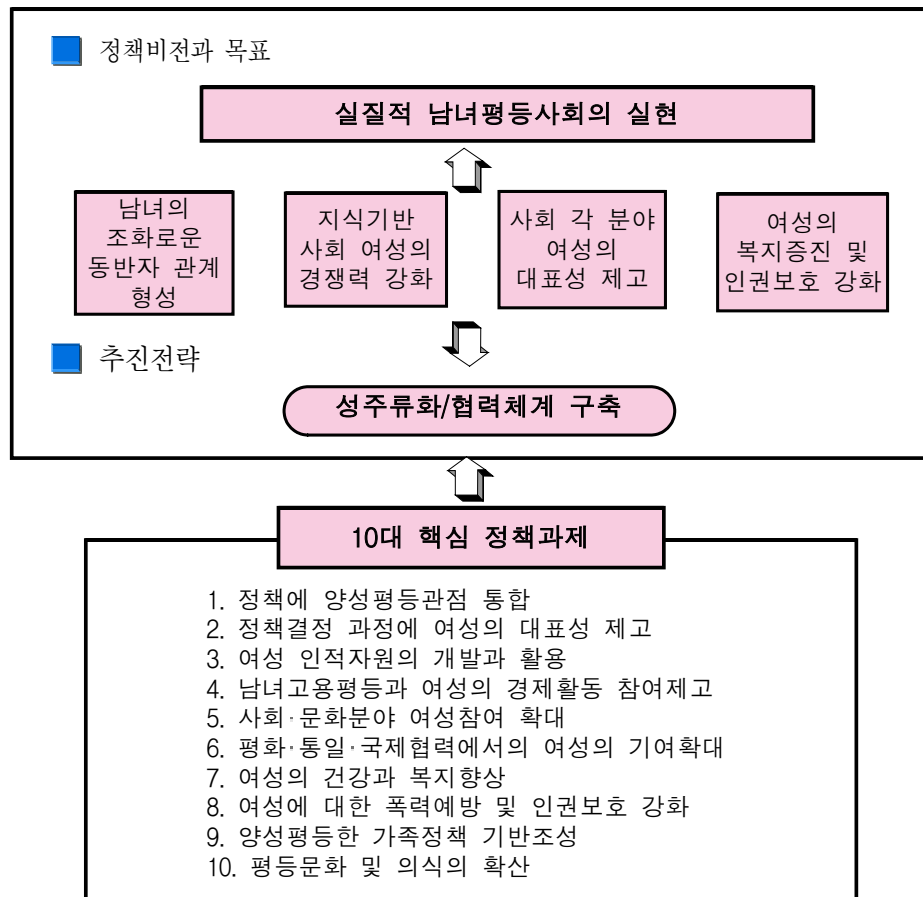
마.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개요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여성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에 근거를 두고 여성발전을 위한 최초의 국가종합계획인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 중에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 전반의 분야별 여성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성정책의 종합계획이며 아울러 정부 전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가계획이다. 동 계획의 정책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10대 핵심정책과제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기본구조



* 자료 : 여성부(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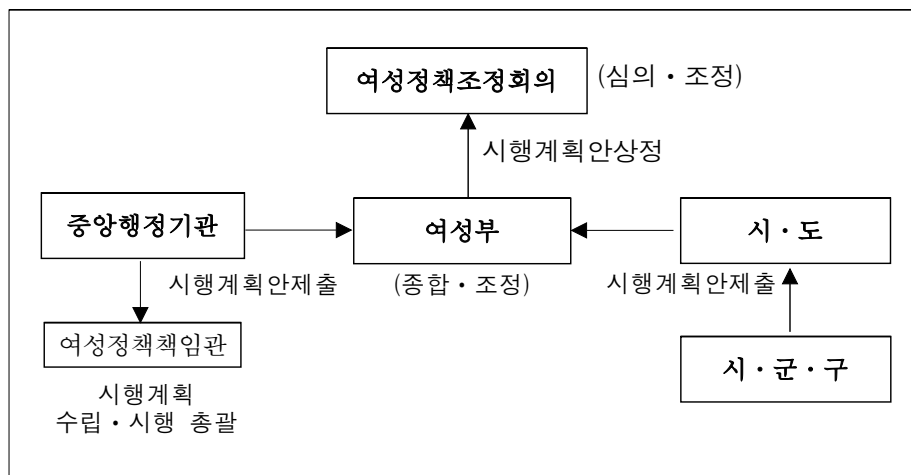
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구체적인 예시로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종합·조정되는 추진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에 지정된 여성정책책임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총괄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여성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안을 종합·조정한다. 이를 위하여 동 시행계획안을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한다.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림 2-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체계



* 자료 : 여성부(200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년도 시행계획, p8.

3)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의 문제점

중장기계획은 계획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설정에 따른 연차적인 추진 실적이 점검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실행계획으로 보고하였으며, 그나마 기관별로 정책수행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보고된 내용도 계획목표를 향한 계획추진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고체계의 비일관성으로 타기관과의 추진실적의 비교는 물론 동일 기관에서도 연도별 실적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였다.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2001)에서는 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체계화된 보고, 모니터 및 평가체계 부재, 피드백 체계 부재 등을 기본계획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다행히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조항이 신설(2003. 3)되었다. 여성부장관이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두거나 전문가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를 환류시키는 여성정책의 평가체계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 여성정보화 및 여성정책정보화

가. 여성정보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인간생활의 전 영역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법과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즉, 컴퓨터와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공학과 인터넷 환경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구성원들은 새로운 의사소통의 체제를 인지하고,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보화(informatization)’에 대한 정의는 그 목적과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통일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정보화는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어떤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인 정보를 의식적으로 생산, 가공, 처리, 유통, 저장, 재생, 활용, 교류하는 활동을 통해, 일의 효율성 촉진과 질적 개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가 재화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보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정보를 창조적으로 선점하고, 더 나아가 정보를 지식으로 가공, 재생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보다 질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한국전산원, 2001: 14). 이러한 정보화의 개념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면 ‘여성관련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여성부, 2001a).

여성정보화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정보화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정보화를 통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산원(2001)의 연구에서는 여성정보화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있다. 광의의 여성정보화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서 여성이 정보화되는 과정이다. 즉, 이 과정은 어떤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인 정보를 의식적으로 생산, 가공, 처리, 유통, 저장, 재생, 활용, 교류하는 활동을 통해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질적으로 개선하여 정보가 재화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 개인의 삶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사회, 국가의 발전에도 공헌하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여성정보화는 광의의 여성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노력들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정의될 수 있다. 즉, 여성의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여성의 정보생산능력을 확대하며 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할 여성정보전문인력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여성 개인의 삶이 질적으로 개선됨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정보활용자로서의 여성, 창조적인 정보생산자로서의 여성, 전문적인 정보직업인으로서의 여성을 협의의 정보화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정보화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

키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정보화의 촉진은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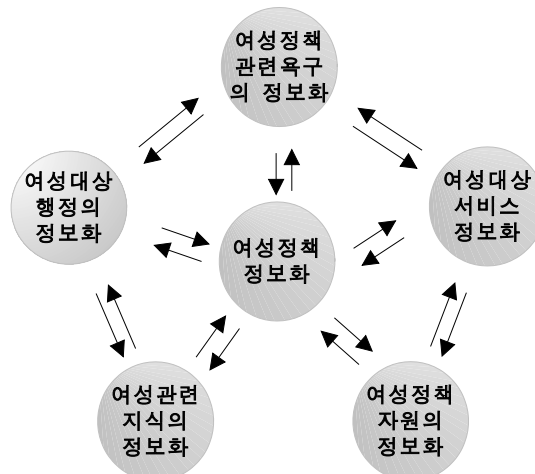
나. 여성정책정보화

일반적으로 적절한 정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의 정보자원관리와 수요측면의 정보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쌍방향적인 상호작용하에 정보화는 발전되는 것이다. 정보화를 여성정책과 연관시켜보면, 여성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하는 여성정책정보의 공급측면과, 공급된 정보를 수요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하는 수요측면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즉, 여성정책정보화는 이러한 상호작용에서의 “여성정책정보 즉, 여성정책 관련 제반 지식 및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여성정책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정보화는 ‘여성정책관련 욕구의 정보화’, ‘여성대상 서비스의 정보화’, ‘여성정책 자원의 정보화’, ‘여성관련 지식의 정보화’, ‘여성대상 행정관리의 정보화’ 등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이는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여성정책정보화의 모형



첫 번째, 여성정책관련 욕구의 정보화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고객 및 수혜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이를 서비스제공에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여성정책정보화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여성대상서비스의 정보화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세 번째, 여성정책 자원의 정보화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재정, 조직 등의 각종 자원의 DB구축을 의미한다. 이는 업무별, 지역별, 조직별로 세분화되어 여성대상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여성관련 지식의 정보화는 여성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연구된 지식과 기술 등의 DB구축을 말한다. 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지식이 모두 포함된다.

다섯 번째, 여성대상 행정관리의 정보화는 조직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산화의 정보와 행정의 작용에서 발생하는 기관의 정보 등을 포함한다. 즉, 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에게 공지하거나 공유하여야 할 지식을 구조화된 전자정보로 저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여성관련 행정기관의 정책정보, 관련 시설의 규모와 서비스 내용, 전문인력 현황, 예산집행내역, 서비스 실적 등이 포함된다.

즉, 여성정책정보화는 [그림 2-3]과 같이 모든 부문과 쌍방향적 영향을 주며 여성정책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정책정보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여성정책정보화를 통해서 여성관련 제반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표준화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업무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정보화의 초기에는 시스템 개발과 적용에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와 재정적인 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여성정책정보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의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인건비의 절감은 바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인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네 번째, 여성정책정보화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신속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 즉,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책임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정보화는 여성정책관련 기관의 업무 표준화를 촉진시켜, 통합적인 관리와 업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2절 전자정부와 지식정보화

전자정부의 구현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반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 및 정책 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반 행정활동의 과정을 혁신하여 여성관련 지식정보화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 개념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구현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자정부의 개념

정보기술의 발전은 많은 부문의 행정개혁과 정부의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정부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전자정부라는 용어가 체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미국의 국가행정평가위원회(NPR)에서 나온 보고서인 “정보기

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대두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정부라 함은 효율적이고 고객 대응적(Customer-responsive)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 및 서비스를 보다 폭넓고 적시에 접근하게 해주는 현대화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NPR, 1993: 1-4).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정보기술의 공급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과 정보기술의 수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결정론(social determinism)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국전산원, 1996: 33-34).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는 기술발전이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이 된다고 본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일차적인 환경으로서 추진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새로운 정보기술은 빠른 업무처리를 제공하고 관련업무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조직의 업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업무수행 인력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조직에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관료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체제가 형성된다. 따라서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 전자정부를 정의한다면, 정보기술은 정부의 개혁을 지향해야 한다. 동시에 이 정부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 행정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통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결정론적 관점에서는 기술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지만 동시에 사회적 압력에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즉, 정부는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수단 이외에 발전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의 확대와 질의 향상을 이루며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해나가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정부는 정부의 생산성이나 성과를 향상시키는 수단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의 개념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 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Relyea 2002: 23-31).

첫째, 인터넷을 사용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변화에 적합한 의사소통의 체계와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부의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화된 정보의 제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수명에 관한 문제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능력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서비스 전달의 측면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전자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곳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부당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면 안 될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정보의 안정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넷째, 관리의 측면에서 책임의식이 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정보기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자금의 확보가 우선시 된다.

다섯째,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평가를 통한 결과의 환류와 적절한 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이버테러나 천재지변 등에 의한 전산망의 마비 등과 같이 전자정부의 작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정부라는 개념은 매우 역동적이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구현은 매우 높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 기존의 정부와 전자정부의 차이점

기존의 관료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부구조의 특징은 내부적인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과(課)제·전문화·표준화 강조와 위로부터의 집중화된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내부적인 의사소통 및 조정 비용 감소와 여러 가지의 규제·절차·표준화의 마련으로 인한 장점이 있으나, 경직성과 절차주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민간부문에서 전자거래의 급속한 발전이 공공 부문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켜 1990년대부터 전자정부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비스전달에서 기술적인 변모 이상으로 정부의 철학과 조직에 있어서 변화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관리의 초점이 국민과의 외부적인 관계로 이동하고,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다 적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변화는 'One Stop Service' 라는 아이디어를 새롭게 하였으며 이것은 기존의 기능적인 과(課)위에 존재하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으로서 전체적인 계획 아래 과(課)를 조정하며 단일 창구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적시에, 편리하게,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Tat-Kei Ho 2002: 435-437).

기존의 체계와 전자정부의 체계를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전자정부의 가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의 시간적인 낭비를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운영의 합리화 등을 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전자정부의 모습을 [그림 2-4]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OMB, 2002: 4-5).

<표 2-2> 기존의 정부구조와 전자정부구조와의 비교

구분	관료제 구조	전자정부 구조
지향	내부적인 생산효율성(비용절감)	외부적인 사용자 만족, 융통성
조직	기능적 합리성, 課조직화, 수직적 계층제	수평적 계층제, 네트워크 조직, 정보공유
관리 원리	규칙과 지시에 의한 관리	신축적 관리, 課間 팀워크
리더십 타입	명령, 통제	조정, 촉진,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내부 의사소통	위에서 아래로, 계층적	다방향의 네트워크성, 직접성
외부 의사소통	중앙집중적, 공식적, 제한된 채널	공식 및 비공식적, 직접 및 빠른 환류, 다양한 채널
서비스 전달 형태	문서형태, 대면	전자교환, 비대면
서비스 전달 원칙	표준화, 공평, 평등	사용자 만족, 개인화

[그림 2-4] 전자정부의 포트폴리오

G2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준의 정부 서비스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 확립 - 국민보험 및 정부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접근, 서비스 전달의 품질 및 능률성 개선을 위한 현대적 관계관리기법 도입 등 	G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자료 수집을 제거하여 산업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E-비즈니스 기술의 활용 - 산업계에 합리화된 one-stop 서비스 제공 - E-비즈니스 언어(XML)를 통한 산업계와의 의사소통 등 업무절차를 도입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감축
G2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고의무를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등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경비절감 및 사업수행 개선 	I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관리, 재정관리, 지식 관리 등 분야에서 산업계의 최선의 업무방식을 도입하여 비용절감 및 연방정부 행정의 질 개선, 능률성 및 효과성 제고, 업무처리 지연 방지, 직원 만족도 제고 등

* 자료 : OMB(2002). E-Government Strategy, p.10.

3. 전자정부 구현의 문제점과 구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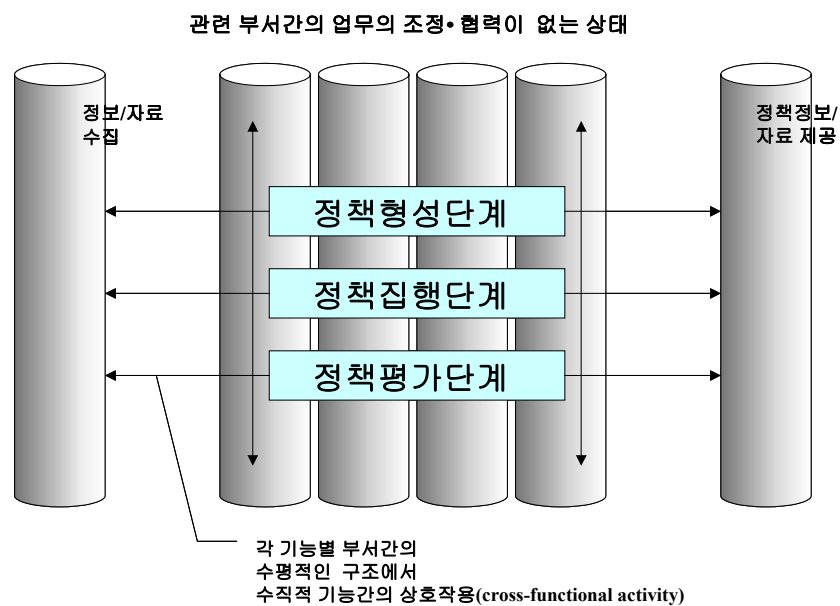
민간부문에서는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종전의 업무방식을 전환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반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지출규모에 상응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첫 번째, 사업성과 가치의 문제로서 현재 전자정부의 모습은 국민의 요구보다는 정부기관 자체의 필요에 얼마나 잘 부응하느냐에 따라 정보기술체계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기술사용의 문제로서 1990년대에 정부는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보다는 기존 절차를 자동화하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고립된 자동화(Island of automation)의 문제로서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내부 필요에 의해 시스템을 구입함에 따라 다른 기관과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의 문제로서 예산 절차와 조직 문화가 기존의 관료주의를 지속 시킴으로써 변화를 막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은 변화에 대한 저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성과 지향, 정책 조정, 훈련, 의사소통, 조직변화 등의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OMB, 2002: 5-6).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그림 2-5]와 같은 stove-pipe¹⁾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나 관련 부서들의 업무가 단절되어 있는 연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이 분산되어 있거나 문서상의 기록으로 되어 있어 이를 공유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업무담당자의 업무에

1) Stove-pipe(난로연통형)구조라는 것은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예로서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업, 부서, Work Group별로 서로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중개기술들을 이용해 이들을 연결하고 있는 상태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의 복잡함, 일관적이지 않은 보안규칙, 최저의 상호운영성, 기업 밖으로의 확장시 난관 등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가 정부내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대한 과신과 실제적으로 공공과 연관된 성과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가 어렵다. 이러한 stove-pipe 구조의 문제는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에서도 중요한 제한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2-5] Stove-pipe 구조



또한 다층의 정부정책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부서의 경우는 유사업무에 대한 주관 부서가 불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공에 대한 서비스 전달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 조직과의 관계에서 감독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분산된 통제구조와 표준의 결핍은 중앙과 지방정부, 나아가 민간과의 요구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Stove-pipe 정책구조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정책집행에서의 stove-pipe 구조는 정보의 공유와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조직들간에 의사소통과 모니터링, 조절을 어렵게 하고 또한 정보화 체계의 복잡성만을 증대시키고 있다 (Cresswell, Pardo, 2001: 270).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의 구현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서 정부 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부서비스와 공공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구현은 재정적·정치적 비용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조건 및 필요성, 장애요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계획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²⁾

첫 번째, 전자정부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는 결코 쉽지도, 비용이 적게 들지도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예산절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며, 다만,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즉, 전자정부를 단순히 정부운영의 전산화(computerization)로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를 개혁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정보 및 사회·경제·정치적 기회에 대한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를 구성하는데 기여하는 수단이다.

두 번째, 전자정부에 대한 비전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자정부의 광범위한 비전은 사회의 주요 관심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전자정부 target 부문은 전자정부의 비전으로부터 나온다. 정부의 목적(purpose)은 사회의 공유된 목표(goals)를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stakeholder³⁾에 의해 공유되는 광범위한 전자정부의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 이때 비전을 정의하고 영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단지 소수의 엘리트 및 공무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자정부의 비전이 공공 및 기업을 위해서 더 좋고 더 풍부한 서비스 및 절차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비자지향적·서비

2) The Working Group on E-Government in the Developing World (2002). *Roadmap for E-Government in the Developing World: 10 Questions E-Government Leaders Should Ask Themselves*. Pacific Council on International Policy.

3) government or non-government, citizen group, associations, businesses, government officials, NGOs, unions, civil society groups 등이 포함됨

스지향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 구현하고자하는 전자정부의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자정부를 위해 필요한 사전조건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나에 따라 전자정부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수준, 법률, 인적자원 등이 달라지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조건은 정부자체(제도, 인력, 예산, 정부간 커뮤니케이션 등) 뿐만 아니라, 국가인프라, 경제상황, 교육, 정보정책 등의 사회적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설비 및 컴퓨터, 정부의 현재 ICT 수준, 충분한 수의 숙련된 ICT 인력, 가용 예산, 법률 및 정보보안 등의 조건, 변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 및 참여 수준 등이 다 포함된다.

네 번째,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이끌어갈 만한 충분한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적극적인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면, 전자정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 부처간 조정, 정책변화 등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즉, 전자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리더는 개혁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공개적으로 전자정부에 대해 지지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최상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ICT 자원이 활용가능한지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실행 사례 및 ICT의 상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향후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토대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자정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우며,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의 절차가 공공에 대해 투명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때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법적 권위가 있는 전자정부를 관리할 팀을 구성하거나, 우선순위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상세한 작업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 stakeholders를 포함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곱 번째, 정부 내부에서의 저항을 극복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은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반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절차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때에 왜 공무원들이 저항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특정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정부 기획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공무원들 특히 고위 관리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포함시켜 그들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보를 다룰 수 있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 번째, 평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정부 구현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성과 표준이 필요하다. 전자정부의 성과는 전자정부가 추진되는 가운데 전달되는 주요 서비스를 통해 보여지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홉 번째, 민간부문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전자정부는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민간부문은 비전/기획과정에서부터 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간부문을 단지 아웃소싱을 위한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의 진정한 파트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의 전자상거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CRM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를 어떻게 유인하고 보유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열 번째,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루어야 한다. 전자정부는 자동화가 아니라, 참여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집단과 협동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정부의 중요한 요소이다. 참여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고, 비용을 들이지 않는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자정부는 공공참여를 통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의 해결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 외에 많은 것들이 전자정부의 구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3절 정보화 전략계획과 지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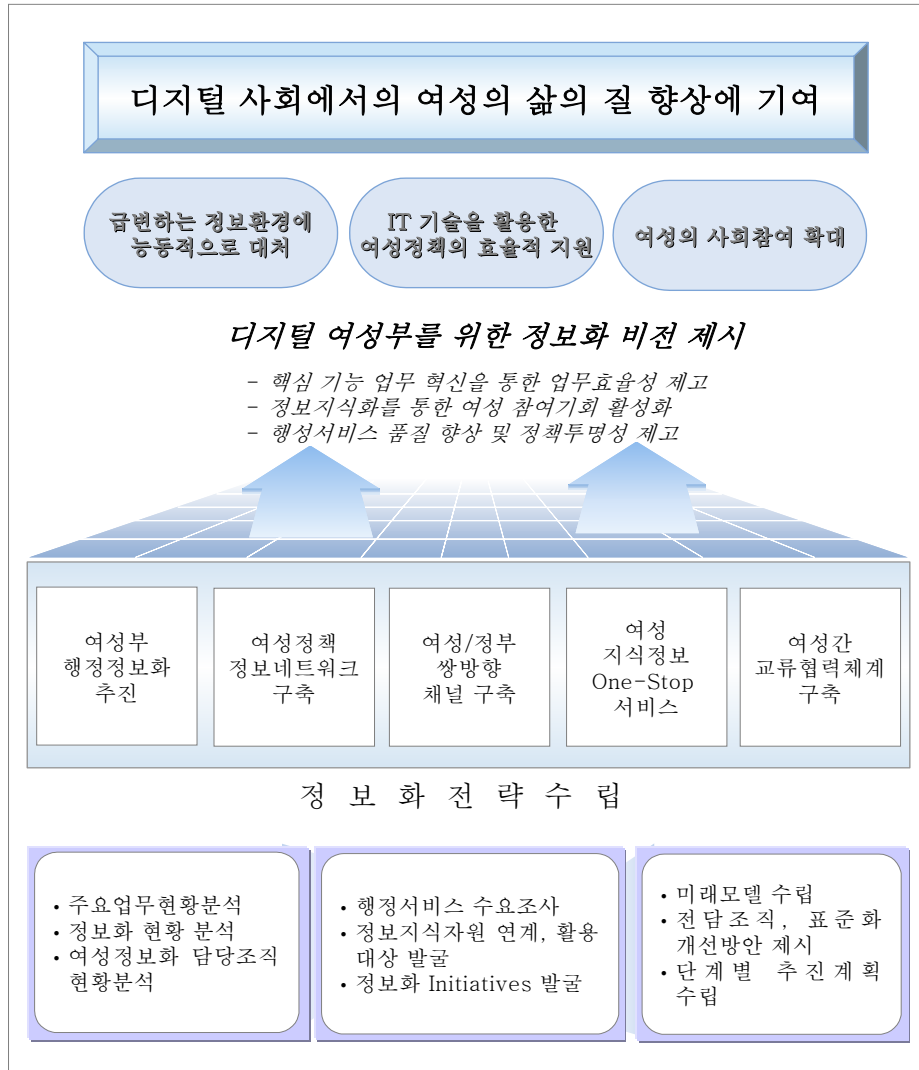
1. 여성정보화 전략계획(ISP)

현재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사업을 더욱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 양 측면의 요구를 결합한 종합적인 여성 관련 사업추진 방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21세기의 선진정보시대에 알맞는 여성정책정보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화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설정하고,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방침에 따라 여성부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여성 관련 정책과 업무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공동활용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성정보화에 대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되고,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의 정보화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여성부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중점과제로 여성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여성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에서 제시하는 여성정보화전략계획의 추진 목표는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여성정보화전략계획(ISP)의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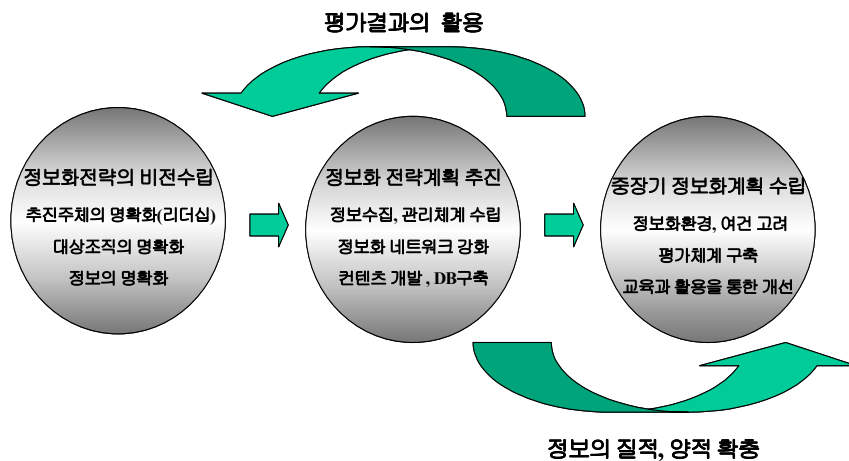


* 자료 : 여성부(2003). 여성정보화촉진을 위한 ISP수립 제안요청서, p.11.

[그림 2-6]에서와 같이 여성부에서 ISP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구비하고, 여성정책의 수요공급차원에서 관련 조직들과의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정책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여성부 ISP의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전략계획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보화 환경 변화, 정보화 수요 변화 등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그림 2-7]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7] 정보화 전략계획의 과정



여성정보화 전략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첫 번째, 여성정보화 추진을 위한 비전 및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부 및 여성 관련 부처의 여성 행정 및 정보화 환경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주요 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을 도출하고, 여성단체의 정보화 현황을 파악하여 여성정책의 구현을 위한 정보화 지원방향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추진주체인 여성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여

성관련 조직의 정보화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 정보를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

두 번째, 여성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과 콘텐츠 개발 전략의 수립 및 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네트워크의 강화와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세 번째, 추진 과정상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이르는 전체 프로젝트 추진 상의 단계별 일정 및 소요자원, 비용, 정보기술의 발전 추세에 따른 적용 가능한 정보, 정보체계, 업무시스템체계, 정보기술체계, 정보관리조직체계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과정상의 평가는 새로운 시스템의 형성에 활용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보화 분야는 지속적인 질적·양적인 정보의 축적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 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식관리시스템(KMS)

가. KMS의 개념과 성격

지식(knowledge)은 데이터(data) 그리고 정보(information)보다 차원이 높은 개념이다. 데이터는 수량, 현상 등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며, 정보는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처리(가공)한 것이다. 지식은 정보를 토대로 사고하거나 경험한 것이며 정보가 의미있게 구성되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에서 정보, 정보에서 지식으로 차원이 높아질수록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행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행정자치부, 2000; 하미승, 2001: 3에서 재인용).

이러한 지식이 조직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1960년대 초기 선진국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지식관리가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행정의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였다(한세익, 2001b: 242).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개념적 연구일 뿐 IT기술을 적용한 실천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최근 웹기술이

발달하면서 조직의 혁신과정에서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식관리라는 개념은 지식경영이라는 개념으로 민간부문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즉 지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경우 자산규모는 제너럴모터스(GM)에 비하여 약 15분의 1인 144억 달러인 반면에 시장가치는 제너럴 모터스의 3배인 1,57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정윤수, 2001: 7-8).

지식관리시스템(KMS)은 조직 내·외부의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식관리과정을 지원하는 인간-기계 시스템이다. 이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조직구성원이나 조직전체 차원의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직 내·외부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부가가치가 있는 지식으로 획득·공유·변환·창조할 수 있도록 지식을 입력, 저장, 검색,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의미한다(문신용, 2000: 92).

지식관리시스템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는 현재화된 지식들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각종 정보시스템과 보고서 및 계획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집적하여 지식의 축적효과와 결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둘째,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현재화·공식화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 노하우, 성공 및 실수 사례, 아이디어 등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형태로 현재화하여 공유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공무원들이 새 업무를 맡을 경우 전임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 받지 못해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셋째, 지식을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지식의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 곳에만 접근하면 많은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식 DB의 구축으로 이를 검색하는 자들에 의하여 고도로 이용될 수 있게 한다. 넷째, 지식을 보다 체계화하고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집적되는 지식을 분야별·계통별로 분류하고 논리화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지식군으로 만들어주며, 지식의 끊임없는 평가를 통하여 지식내용을 개선하게 해 줄 수 있다. 다섯째,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유도

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을 통한 지식의 상호교환과 조직학습을 통하여 기존의 지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기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의 차이는 <표 2-3>과 같다(하미승 2001: 5-6).

<표 2-3> 기존 행정정보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의 비교

	기존 행정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목적	자료처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정보관리를 통한 정책결정 지원	지식자원관리를 통한 전체조직의 경쟁력 및 가치창출력 제고
대상	현재화된 데이터 및 정보	현재화된 지식 및 잠재적 지식
활동	자료수집 및 DB 구축 데이터 처리, 정보분석, 결정지원	지식의 획득 및 지식베이스 구축 지식의 통합, 체계화, 활용 및 창출
범위	단위업무 중심 특정영역(정책분야)에 한정	전 업무범위 포함 전체조직과 영역에 종합적 적용
사용자	정보시스템별로 분리참여	하나의 종합지식시스템에 모두 참여
문제와 관련성	문제파악 및 확인 문제해결 지원	문제해결에 직접적 활용 문제해결능력의 극대화

* 자료 : 하미승(2001). 정부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확충방안, p.6.

나. KMS의 추진전략

지식관리시스템은 여러 가지 정보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정보기술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모든 시스템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지식관리시스템 추진전략의 핵심은 단위업무의 수행기간에 국한된 지식관리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식관리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체제로서 이루어지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는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식관리시스템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수행이전단계

기존의 IT 인프라를 활용한 기본적인 정보공유 시기로서 메일이나 전자게시판 또는 기본적인 형태의 문서관리도구, 업무함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축적된 지식이라는 개념은 있으나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지식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기이다. 여기서는 시범사업의 선정을 통하여 표준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다.

② 2단계: 수행단계

이는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의 기간이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식 관리 프로젝트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지식을 수집, 가공하여 초기 지식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각종 지식관리 관련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초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③ 3단계: 활용단계

이 단계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의 활용수준이 점차 고도화되어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변화관리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결실을 맺는 단계이며, 자발적으로 지식DB가 확산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되는 시기이다. 아울러 지식DB에 대한 관리조직의 업무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지식관리체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연계가 상당 부분 진전된 단계이다.

④ 4단계: 고도 활용기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가 지식관리체제와 거의 완벽하게 연계되며 모든 주요 업무 프로세스가 지식관리체제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확신하는 단계로서, 직원들은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화된 소수인력이 지식DB를 운영·관리하며 중심의 조직을 두고, 내·외부에 인적 지식 네트워크가 완전히 갖추어져 언제든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및 체제가 갖추어진 시기이다.

행정자치부의 2002년 운영지침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식 관리의 성공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기관장의 지식관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이는 기관장들이 지식관리의 정착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기관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지식관리의 제도화를 말하고 있다.

두 번째,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이다. 이는 기관별로 전문강사에 의한 직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식마인드를 확산하고, 운영실적에 따른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학습 및 연구조직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이다. 이는 수시포상, 정기포상 등을 통해 등록되는 지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지식모으기 운동이나, 지식공모제 등을 통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식의 창출보다는 지식공유활동 만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의 측면에서의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조직문화와 정책리더의 정보화 리더십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변화에 있어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KMS의 성과 모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식관리시스템

행정자치부는 2000년 5월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작성, 발표하였다. 본 계획서에서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지식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식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록경시 문화와 지식공유의 동기부족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으며, 둘째, 권한과 외형위주의 업무를 선호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정보시스템의 내용이 부실하여 투자비용에 비하여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들고 있다(행정자치부 2000: 2).

행정자치부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의 목적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지식의 공동활용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발굴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식경영(Know-

ledge Management)기법을 정부 행정에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하우, 경험, 아이디어, 정책자료 등 실천적 지식을 조직의 공유자산으로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을 2001년 9월 수요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각급 기관에 보급·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은 13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식관리 실무자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시스템 구성 및 콘텐츠 등의 각급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표준모델로서 개발되었다.

2001년 4월 부터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경상북도·경기 과천시 등 8개 기관에서 시범운동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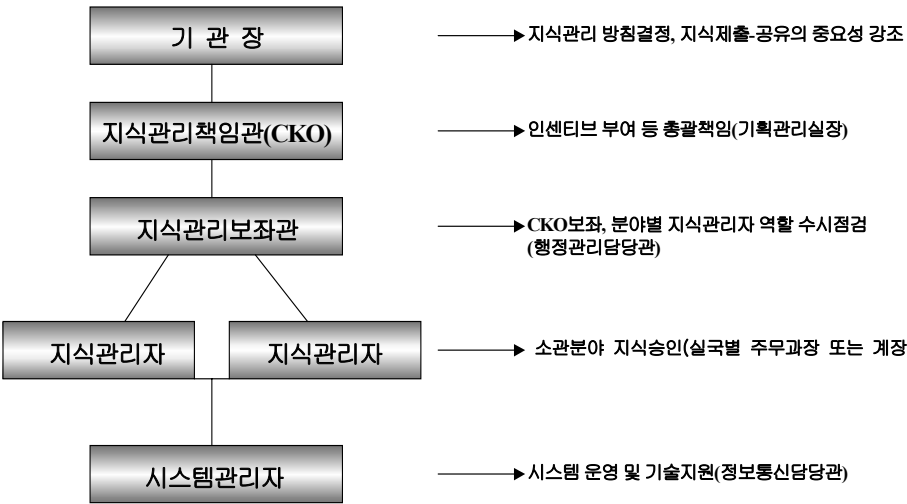
여기에는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식관리책임관(CKO), 지식관리보좌관, 지식관리자, 시스템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식관리 업무는 새로운 지원업무이므로 전반적인 제도운영은 행정관리부서에서, 기술지원은 전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각급 기관에 지식관리시스템이 보급·확산되는 2002년부터 행정기관 간에 업무 노하우·경험 등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지식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각 기관의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지식공유체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다.

정부지식관리센터는 기관간 지식공유를 위하여 기관별로 구축된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식지도(Knowledge Map)와 지식목록을 통합적으로 관리(각 기관에서는 센터를 통하여 타 기관의 지식에 접근)하며,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Help Desk를 운영하며, 우수지식의 추천·포상 및 지식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등 제도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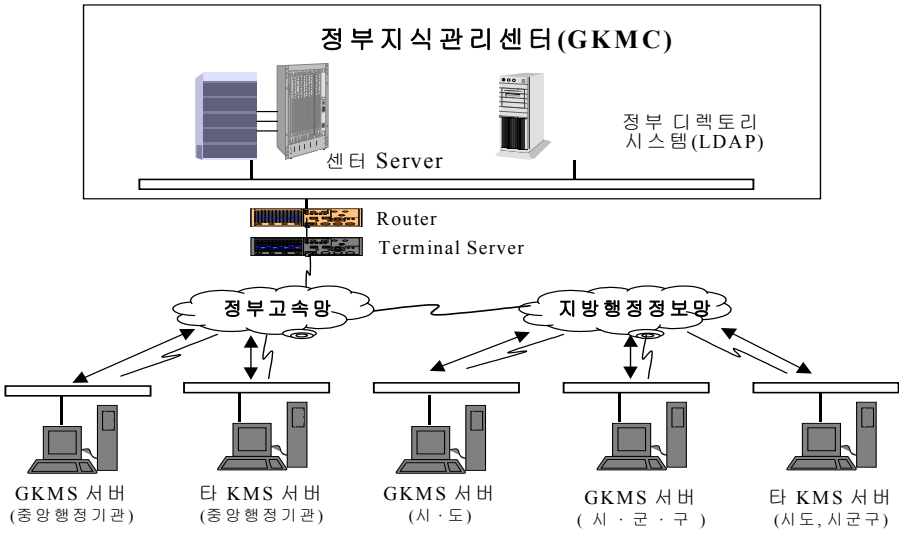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지식관리시스템 보급 및 정부지식관리센터 구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전임자의 노하우를 단기간에 습득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기관간 지식공유를 촉진하고 우수 지식사례의 확산 및 학습기회 제공으로 지식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1).

[그림 2-8] 행정자치부의 담당구조



* 자료 : 행정자치부(2002).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p.6.

[그림 2-9] 정부지식관리센터 개념도



* 자료 : 행정자치부(2002).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p.6.

3.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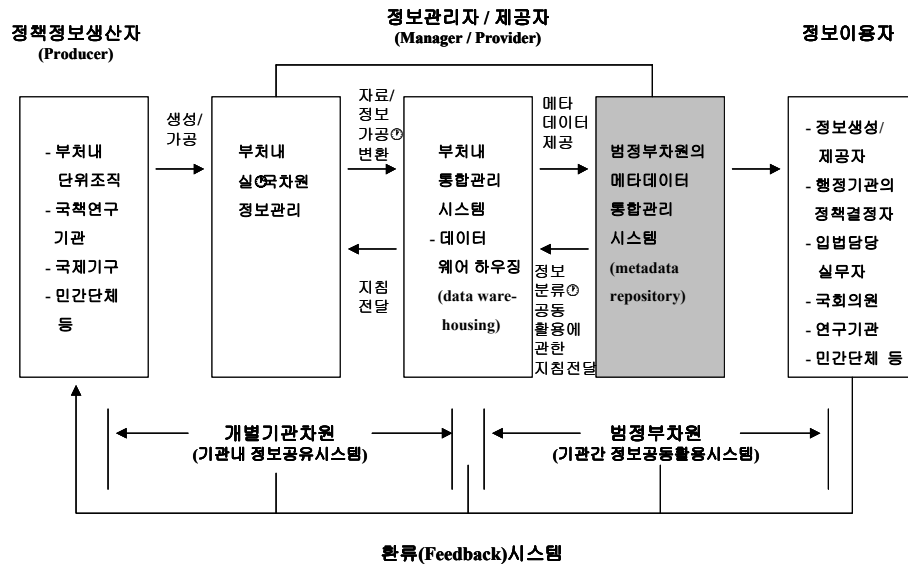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⁴⁾이란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정리, 저장하여 정책결정자가 필요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 지원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박재희. 2001, 8-9).

가.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대한 정보(메타데이터, 데이터 사전 등),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기술기반(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력기반(시스템관리자, 정보관리자), 정보제공자와 사용자,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의 웹 기반 정보창고(web-based clearinghouse) 등이 있다. 시스템에서의 산출효과는 사용 가능한 정책정보의 양과 질, 활용수준과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박재희. 2001: 9).

4) 이론적으로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은 기존의 행정관리정보시스템(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와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박재희. 2001, 12).

[그림 2-10]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개념도



* 자료 : 박재희(2001).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p.8.

나.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특성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목적은 첫 번째, 양질의 정책정보의 확보 및 정보의 종합적 관리, 두 번째, 정책정보의 조직간,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정보의 통합이 아니라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통합하는데 있다. 즉 공동이용대상정보는 해당정보를 생성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정보에 대한 소유권과 가공, 처리, 제공권을 갖되, 다만 종합관리센터를 통해 회원들간에 제공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스템의 목적이다.

그러나 정보통합시스템은 통합DB 등의 구축을 통해 각 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장애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국가 정보의 집중화, 독점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시스템의 구축 목적에 따라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다만, 대민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주민정보, 부동산정보, 자

동차정보 등의 행정정보를 관련기관이 공유하기 위하여 통합DB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IT분야의 획기적인 기술발전과 더불어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되거나, 처음부터 디지털화된 정보로 만들어짐으로써 전자정보의 범위와 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행정기관과 연구기관들은 정보의 디지털화를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국가정보의 관리방식도 종전의 아날로그 방식으로부터 탈피하고 디지털방식에서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들 디지털 정보가 가지는 장점으로는 전달의 용이성, 효과적인 비용의 절약, 사용자의 접근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전자 또는 인터넷상에서의 국가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특징은 국가정책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의 공동이용의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박재희, 2001, 11-12).

다. 정책정보종합시스템의 내용⁵⁾

1) 기술적 측면

정책종합관리시스템은 기술 의존적인 측면이 강하다. 오늘날 표준에 근거한 네트워크들과 정보 및 지식관리 도구들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광범위한 정보 공유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망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정부통합웹사이트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하드웨어적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시스템의 호환성을 고려한 설계와 정보처리방식의 표준화, 두 번째,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의 확보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의 확보, 세 번째, 자료와 프로그램의 독립성의 확보, 마지막으로 민간부문과의 지식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정책정보시스템은 국가간 정보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박재희(2001),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pp50-85 참조.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의 구축,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지능적 검색기능을 위한 도구의 개발, 검색기능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정보 측면

정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정책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고 정책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스템 호환성이 부처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 데이터의 표준화는 공동정보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를 표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 표준화작업을 진행하다 전체 시스템 구축작업이 진전이 안 된다거나, 강제로 표준화시킨다고 해도 사용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일관된 운영상이나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메타데이터⁶⁾는 대량의 정보 속에서 이용자가 찾는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가 범정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메타데이터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주요 기능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정보내용 기술의 표준화, 정보자원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수단의 제공, 사용자에게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정보(정보의 종류, 출처, 주요내용, 정보저장 장소 등)의 제공, 동일 자료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투자제거, 관련 정보의 연결 등을 들 수 있다.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양한 자료들이 응용하기 쉽고 사용하기가 간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부 내 다른 정보시스템은 물론이

6)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또는 ‘자료의 형식과 내용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정형화된 메타데이터는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며, 개개의 요소들은 각기 정보자료의 특별한 단면을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책명, 저자명, 발행인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는 도서관카탈로그는 서적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메타데이터는 공식적인 정보관리와 효과적인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고 가능한 민간부문의 유사시스템과도 서로 교차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표준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

3) 조직관리 측면

조직관리의 측면에서는 시스템 운영을 총괄할 전담기구와 각 기관별로 정책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력배치의 재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통합시스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주체는 ‘정책정보종합관리센터’로서 이를 각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능은 시스템운영관리의 총괄업무와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정보/자료들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즉, 개별기관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정책정보/자료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들을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주축인 정부통합웹사이트 한 곳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를 사용한 검색엔진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정보/자료들에 대한 검색과 입수하는 방법 등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보가 공개 가능한 것일 경우는 직접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download) 받을 수 있다.

종합관리센터의 각 부처 하부조직으로는 부처별 ‘전산·정보관리센터’를 두도록 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내에는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지원과, 자료실, 전산실, 전산통계담당관 등의 전산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정보 또는 자료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정보종합관리센터의 부처내 하부조직은 별도로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정보화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현 조직구조를 크게 변화하지 않고도 실행이 가능하다. 특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관별로 조사 분석기능, 자료·정보 관리기능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보화담당조직과 함께 현재 부처내에서 조사업무, 자료관리업무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묶어서 ‘전산·정보관리센터’ 등으로 그 기능을 확대·재편할 수도 있다.

또한, 질적관리를 위해 원시자료(raw data)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정보분석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결정자 및 정책관련 업무담당실무자들이 관련정보 수집을 위해 이 시스템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다양성과 정확성 등에서 양적·질적으로 만족할 수준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시사점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성을 도출하고 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살펴본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책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정책정보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여성정책의 핵심전략인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의 핵심수단으로 추진하는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현방향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는 관계 부처간 협조가 미흡하고 업무가 단절되어 있는 stove-pipe구조가 여성정책부서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달 관리조직의 필요성, 최고책임자의 적극적 의지, 부처간 조정, 그리고 평가체계 구축 등은 여성정책정보시스템 구축시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셋째, 여성정책 정보의 관리체계는 지식관리시스템의 모형과 유사하다. 지식관리시스템이 조직 내·외부의 지식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여성정책 정보관리의 특수성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정책리더의 정보화 리더십,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시스템을 통하여 지식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식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정책 정보관리는 양질의 정책정보 확보, 종합적 관리, 그리고 기관 간의 공동활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정보시스템 개발시에는 기술적 측면, 정보측면, 그리고 조직관리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Ⅲ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 분석

제1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 현황	51
제2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	75



제1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 현황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여성정책정보의 전달체계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각 부처별 차이는 있지만 KMS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었으며, 전자결재 및 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지방과는 연례보고와 전자결재를 통해 여성정책업무가 추진되고 있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전자결재를 통해 업무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여성부나 한국여성개발원,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 관련사이트에서 찾거나 직접 전화, 팩스, 출장 등을 통해 얻고 있었으며, 각 기관간의 정보교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보다 전반적인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정책업무의 내용, 업무수행환경, 여성정책정보의 수집현황, 업무관련 인터넷활용현황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업무의 내용

현재 여성정책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여성부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있는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고용평등국),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각 부처별 업무 중 일부에서 여성관련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다.

또 지난 5월 중앙행정기관별 양성평등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45명의 여성정책책임관(Senior Gender Equality Officer)을 지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표 3-1> 여성부의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근 거 법 령
여성정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 및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여성정책 기획·종합·조정 -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주요국가정책에 대한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분석·평가 -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교육 	여성발전기본법
대외협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활동 지원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여성자원봉사 - 여성관련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국제회의 -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 여성 국제전문인력 양성 	
차별개선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차별피해자 신고접수·조사 - 남녀차별 개선업무 관련 조사·연구 - 남녀차별·성희롱 예방 교육·홍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권익증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권익증진 계획의 수립 -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 보호시설, 상담소, 관련단체 지원·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 윤락행위등방지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생활안정지원법

< 45개 여성정책책임관의 2003년도 주요 업무지침 >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국가계획, '03-07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0% 달성을 위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등 양성 평등한 인사정책추진
 - 연 1회 이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 교육실시
-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 성 인지적 예산분석(Gender-Sensitive Budget Analysis)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 정부 위원회에 여성위원참여율을 '07년까지 40% 달성

- 단, 신설 또는 재구성되는 위원회는 금년부터 40%
- 기관 내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적극 검토(현재 5개 기관 설치)
- 호주제 폐지 시 정비되어야 할 법령 검토

<표 3-2>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주요업무

부 처	주 요 업 무
교육인적자원부 (여성 교육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성 차별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개선 - 양성평등한 직업, 진로교육 확산 -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의 활성화 - 여교원의 능력개발 및 권익 보호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차별적 법령 및 제도의 발굴·개선 - 가정폭력·성폭력 처벌 및 예방 대책 -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여성 수용자 및 보호소녀 처우 개선 - 여성 법조인 교정, 보호시설 방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등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와 여성 공무원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 및 공직사회 남녀평등의식 확산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및 농촌지역 보육 서비스 향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여성농업인 정책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건강증진과 여성의 경제력 보장, 여성 복지 서비스의 확대 - 성차별적인 법령, 제도의 개선, 보건복지 여성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보건복지 분야의 여성인력현황분석 -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및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의 정기점검 및 참여 확대 촉구
노동부 (평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에서의 차별적 관행 및 제도를 개선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 모성 보호 및 직장가정의 양립지원 - 여성 실업대책 추진 - 연소근로자의 보호 및 복지증진

한편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국 단위의 조직을 갖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과 연계되어있는 여성정책과제는 주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한 과제로서 보육, 여성의 사회참여현황 등이었다. 이러한 과제들은 각각 여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업무가 추진되고 있었으며, 각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별도로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었다.

현재 추진되고 여성정책관련 주요 업무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번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제 현황은 <부록>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관련부서(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⁷⁾

- 자치법규의 성차별적 내용 발굴 정비
- 여성주간행사 추진
- 남녀차별개선신고 센터 운영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 여성회관 등 여성관련 시설 운영
- 저소득 편부모가정 지원
-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지원
- 모자일시보호 시설 운영지원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분위기 확산

2. 여성정책업무 수행환경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에 앞서 이를 이용하게 될 여성정책담당자들의 여성정책업무 수행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정책업무의 수행과정과 수행과

7)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정책과제의 세부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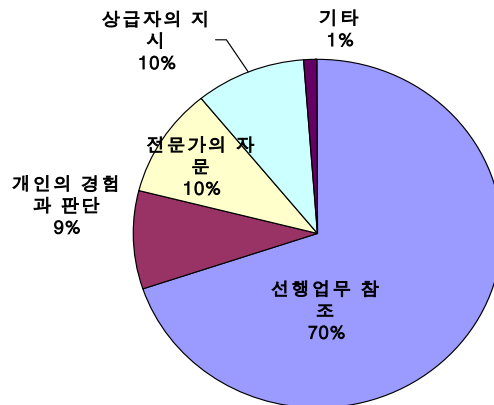
정에서의 장애요인, 여성정책정보관련 홈페이지 운영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여성정책업무의 수행과정

1) 여성정책업무의 결정방식

“여성정책업무관련 기획(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상급자에게 제출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69.5%)가 ‘선행 업무의 진행방식과 결과를 참고하여 기획(안)을 작성’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동료직원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획(안)작성’(10.2%), ‘상급자의 지시를 토대로 기획(안) 작성’(9.7%), ‘담당자 개인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기획(안) 작성’(9.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여성업무의 결정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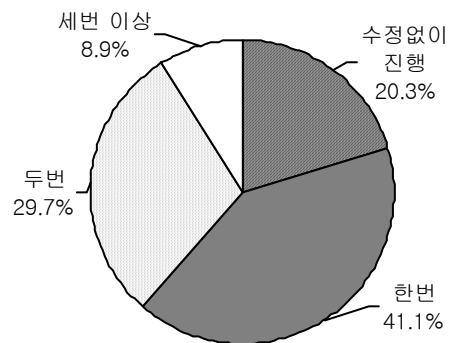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선행 업무의 진행방식과 결과를 참고하여 기획(안) 작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71.7%)의 가장 많은 수가 응답하고 있으며, 시·군·구와 중앙행정기관이 각각 69.3%, 68.4%로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그 다음으로 ‘동료직원이나 전문가의 자문’(26.3%)에 응답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상급자의 지시 토대’(13.0%)에 그다음 순위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시·군·구에서는 ‘담당자 개인의 경험과 판단’(10.8%), ‘동료직원이나 전문가 자문’(10.2%)의 순으로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2) 여성정책업무의 결정과정

담당자의 사업기획(안)이 결정되기까지의 수정횟수를 묻는 질문에서 ‘한 번 수정’하는 경우가 41.1%로 가장 많았고, 두 번이 29.7%, 세 번 이상이 8.9%, 수정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20.3%가 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두 번 수정’과 ‘세 번 수정’에 각각 36.8%로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한 번 수정’과 ‘두 번 수정’이 각각 37.0%, 39.1%였고, 시·군·구에서는 ‘한 번 수정’한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아 중앙보다는 시·군·구 단위로 내려갈수록 정책담당자의 결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사업기획(안)의 결정까지의 수정횟수(전체)



이상의 여성정책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선행업무의 진행방식과 결과를 참조하여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69.5%로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었으며, 결재과정에서의 수정횟수에서는 ‘한번’수정(41.1%)하거나 수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20.3%)도 꽤 많아 향후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지식정보의 내용 속에 ‘업무담당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포함시키고, 결재과정에서 수정·보완되는 기회가 적은 정책담당자들이 질 높은 기획(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안)작성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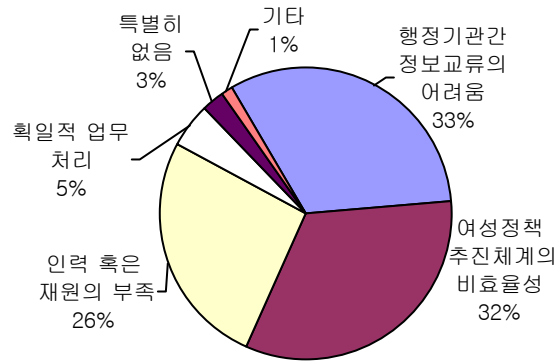
나. 여성정책업무수행의 장애요인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된 여성정책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처 내 실·국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 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며, 부처간의 정보교류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역실정에 대한 정보부재로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는 중앙위주의 여성정책과제가 하달되는 문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가 제한되거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호환상의 어려움, 업무와 인사의 변동시 업무파악의 어려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필요한 자료가 폐기됨으로 인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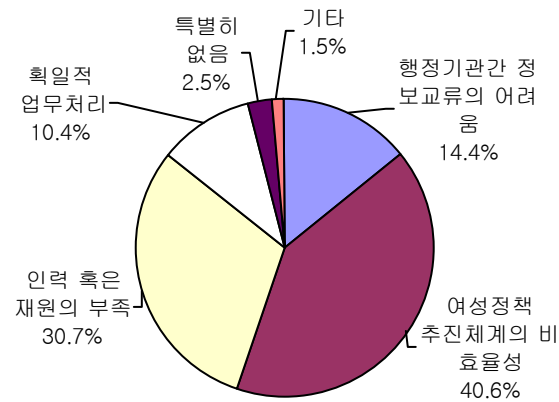
여성정책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1순위 응답에서 전체 응답자의 32.3%가 ‘여성정책관련 행정기관 간 정보교류의 어려움’을 말하였고, 32%가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들었다. 26%는 ‘인력 혹은 재원의 부족’을 선택하였다. 지역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36.8%가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고,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경우는 각각 34.8%, 32.0%가 ‘여성정책관련 행정기관 간 정보교류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림 3-3] 여성정책업무의 장애요인(1순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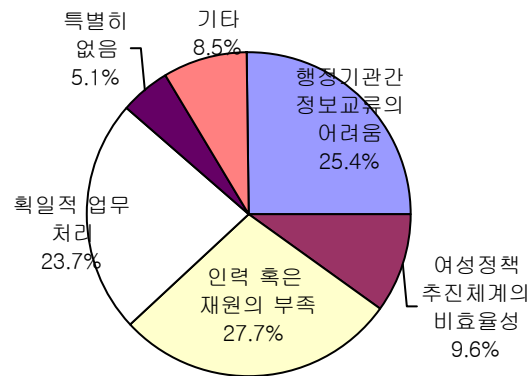
2순위 응답에서는 40.6%가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30.7%가 ‘인력 또는 재원의 부족’을 들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가장 많은 응답(31.3%)이 ‘인력 또는 재원의 부족’인 반면, 지방자치단체(44.1%)와 시·군·구(42.6%)는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에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었다.

[그림 3-4] 여성정책업무의 장애요인(2순위 선택)



3순위 응답에서는 응답자의 27.7%가 ‘인력 또는 재원의 부족’을, 25.4%가 ‘여성정책관련 행정기관 간 정보교류의 어려움’을, 23.7%가 ‘획일적인 업무처리’를 지적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28.6%가 ‘여성정책관련 행정기관 간 정보교류의 어려움’과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각각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6.7%가 ‘획일적인 업무처리’를 시·군·구의 29.4%가 ‘인력 또는 재원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림 3-5] 여성정책업무의 장애요인(3순위 선택)



여성정책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은 심층면접에서 조사된 결과와 일치하여 ‘여성정책관련 행정기관 간의 정보교류 어려움’과 ‘여성정책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어 여성정책업무관련 전달체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향후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정보의 교류가 가능한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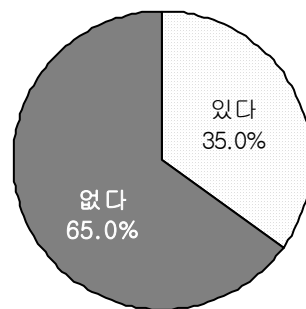
다. 여성정책정보관련 웹 사이트 운영현황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의 온라인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정책관련 정보가 기관 웹 사이트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 관리는 누가 맡고 있는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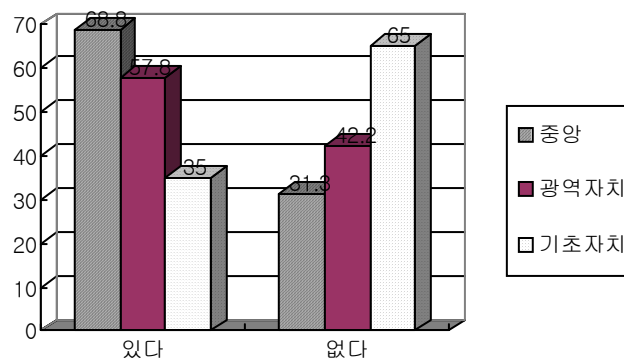
여성정책관련 웹 사이트 운영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현황이나 여성 통계 등 여성정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기관 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5.0%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63.2%와 지방자치단체의 58.7%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시·군·구는 26.0%만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해 지역간 정보격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3-6] 별도의 웹 사이트 운영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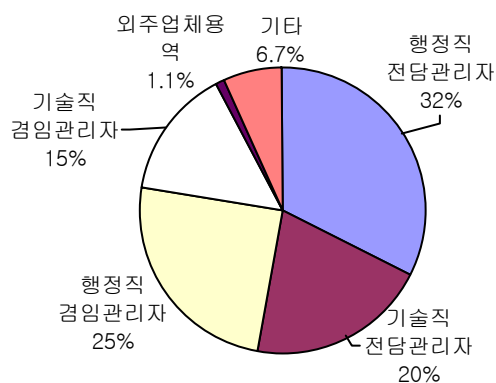


[그림 3-7] 별도의 웹 사이트 운영여부(지역별 비교)



별도의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웹 사이트의 관리는 전체 응답자의 52.8%가 행정직 또는 기술직의 전담관리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중앙행정기관에서는 53.9%가 업무와 겸임하며 관리하는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는 각각 39.3%와 36.0%가 업무와 겸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림 3-8] 별도의 웹 사이트 관리



여성정책정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웹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63.2%, 58.7%인데 비해 시·군·구는 26.0%에 불과해 지역별 정보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정책정보 시스템이 개발되면 여성정책정보와 관련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웹 사이트의 관리를 업무담당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여성정책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어 매우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반수 정도만이 업무와 겸임하여 관리하고 있어 여성정책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기술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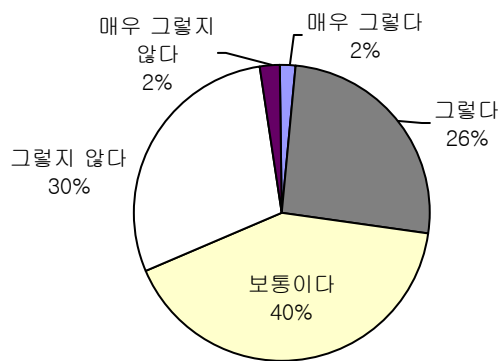
3. 여성정책정보 수집현황

여성정책정보의 전달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정책정보 수집의 용이성과 수집경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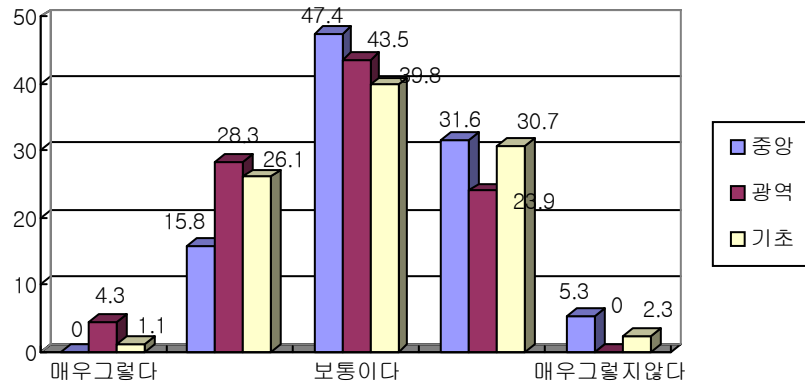
가. 여성정책정보수집의 용이성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27.5%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여성정책정보의 수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정책정보의 DB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시일이 경과한 정보들이 유실되어버린 데 기인하고 있어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지식정보의 DB구축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32.6%)와 시·군·구(27.3%)보다 낮은 15.8%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여성정책정보의 전달체계는 그나마 지방에서 좀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정보수집의 용이성



[그림 3-10] 정보수집의 용이성(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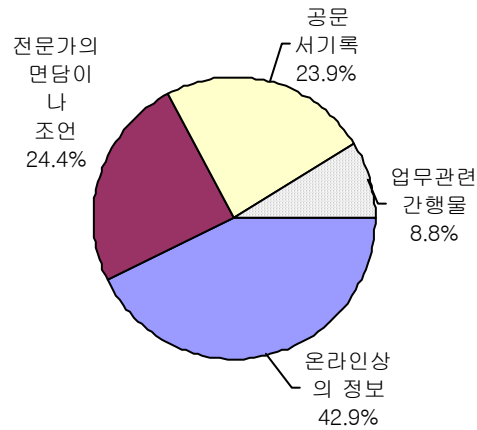


여성정책정보 수집의 용이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27.5%만이 ‘그렇다’로 응답해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원활한 행정기관간의 정보교류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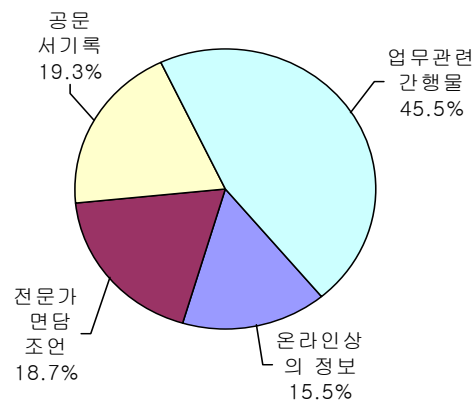
나. 여성정책정보의 획득경로

여성정책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는가에 대한 우선 순위별 질문에 대해 1순위 응답 중 ‘온라인상의 정보’가 42.9%로 가장 많았고, 2순위 응답 중 45.5%가 ‘연구사업보고서나 교육자료 등의 업무관련 간행물’이라고 답했다.

[그림 3-11] 여성정책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경로
1순위 선택



2순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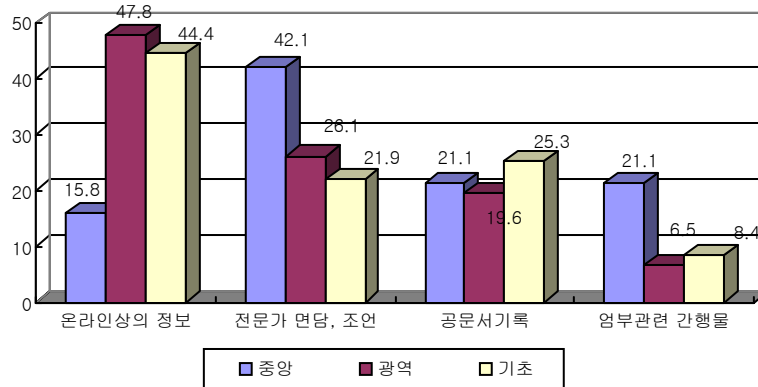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47.8%와 시·군·구의 44.4%가 1순위 응답으로 ‘온라인상의 정보’가 가장 많은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42.1%가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이나 상급자의 조언’이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상의 정보’에 응답한 비율은 15.8%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에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경험과 지식이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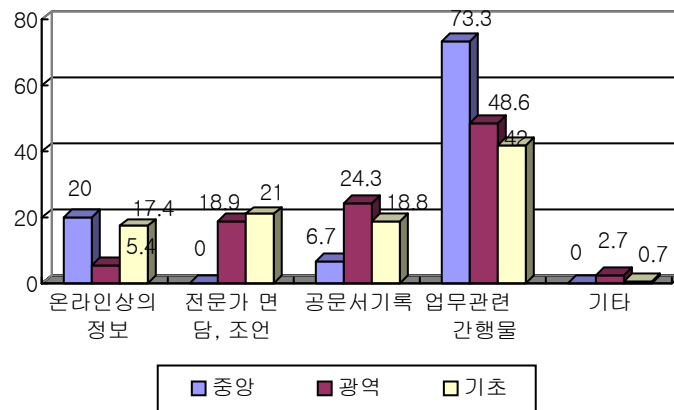
방의 여성정책업무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풍부한 여성정책정보를 제공하도록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림 3-12] 여성정책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경로(지역별 비교)
1순위 선택



2순위 응답에서 ‘연구사업보고서나 교육자료 등의 업무관련 간행물’에 응답한 비율은 중앙행정기관이 73.3%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가 48.6%와 42.0%의 순으로 답하고 있어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에서는 업무관련 간행물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림 3-13] 여성정책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경로(지역별 비교)
2순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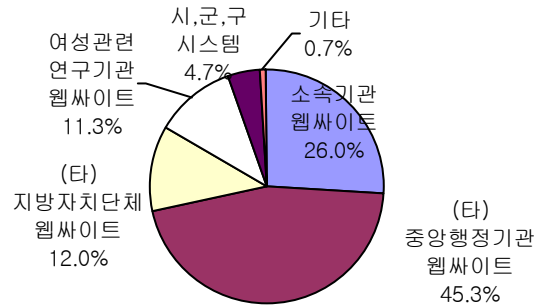


여성정책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경로를 보면 현재 여성정책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온라인상의 정보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근원, 획득경로로 활용되어 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정보네트워크인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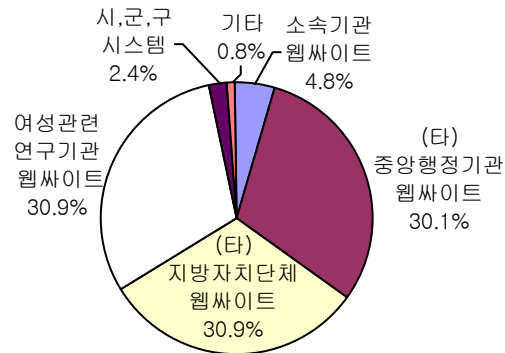
다. 온라인상의 여성정책정보소스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우선순위별 정보소스를 보면 1순위 응답 중 45.3%가 '(타)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에 응답했으며, '소속기관 웹사이트'(26.0%), '(타)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순위 응답에서는 (타)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연구기관의 웹사이트가 31.0%로 공동1위였으며, 그다음이 (타)중앙행정기관으로 30.2%가 응답했다.

[그림 3-14]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의 정보소스(1순위 선택)



[그림 3-15]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의 정보소스(2순위 선택)



지역별로 보면 1순위 응답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응답자의 33.3%가 소속기관, (타)중앙행정기관, (타)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55.2%)와 시·군·구(44.0%)에서는 (타)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소속기관 웹사이트를 각각 34.5%와 23.3%가 그 다음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순위 응답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66.7%가 소속기관 웹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29.2%가 (타)중앙행정기관과 (타)지방자치단체 웹 사이트를 각각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시·군·구의 경우는 (타)지방자치단체 웹 사이트(33.3%),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연구기관 웹 사이트

(29.2%)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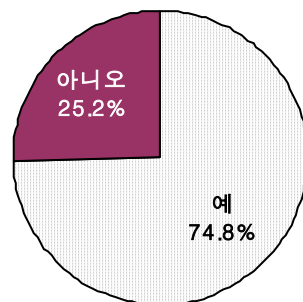
위의 결과에서 여성정책담당자는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경로에서 얻고자 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여성정책업무관련 인터넷활용 현황

가. 여성정책정보의 제공여부

앞서 조사한 여성정책정보관련 독립적인 웹 사이트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35.0%만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정책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정보가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4.8%가 ‘그렇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기관에서 여성정책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8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지방자치단체(82.6%), 시·군·구(7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여성정책정보의 제공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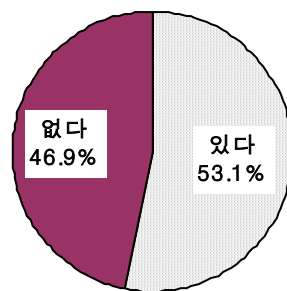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로 비교적 많은 여성정책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이 개발되었을 때 그 활용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여성정책업무관련 인터넷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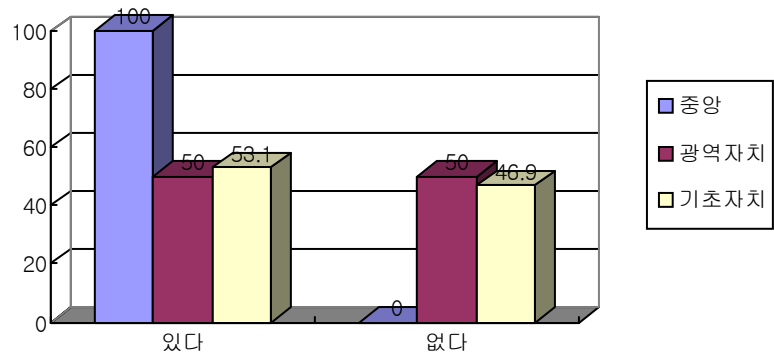
1) 온라인상 문의에 대한 응답정도

[그림 3-17] 온라인상 문의에 대한 응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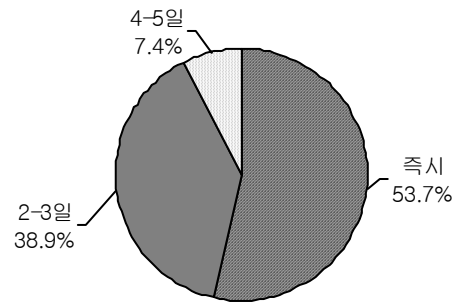
여성정책관련 업무정보가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우 온라인상으로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1%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여성정책정보화는 많이 진전되었지만 여성정책담당자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온라인상 문의에 대한 응답정도(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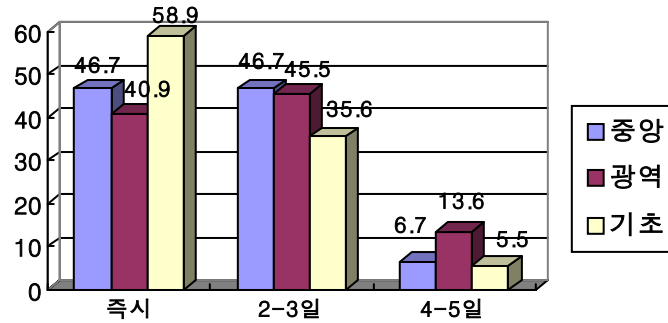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88.2%가 응답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경우는 ‘있다’에 각각 48.8%와 49.6%가 응답, 지역간 격차를 보이고 있어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이 개발된 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보기술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19] 온라인상 문의에 대한 응답의 기간



[그림 3-20] 온라인상 문의에 대한 응답의 기간(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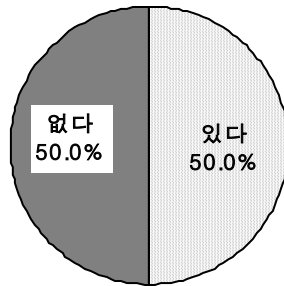
온라인상의 문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3.7%가 즉시 응답하였으며, 2~3일(38.9%), 4~5일(7.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일 이상 걸린 경우는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즉시 응답한 경우 시·군·구가 5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중앙행정기관(46.7%), 지방자치단체(40.9%) 순으로 나타났다.

2) 온라인상에서 제시된 의견의 업무반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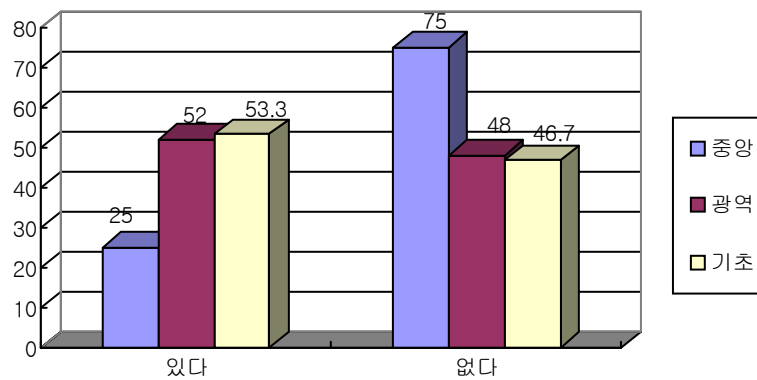
업무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제시된 의견을 담당업무에 반영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과반수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시·군·구가 5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중앙행정기관(52.0%), 지방자치단체(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온라인상 제시된 의견의 업무반영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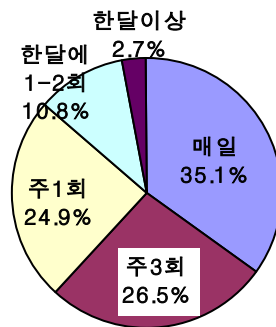
[그림 3-22] 온라인상 제시된 의견의 업무반영정도(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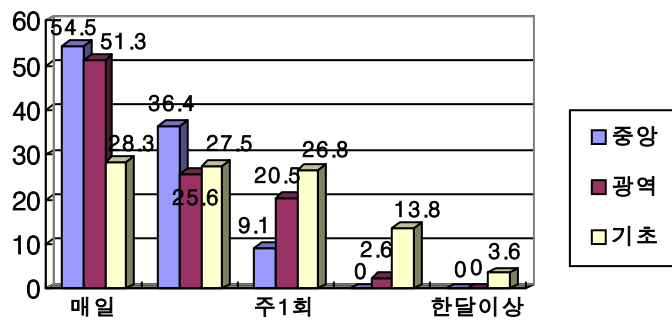
3) 여성정책정보수집 위한 인터넷 이용정도

“여성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일’(35.1%), ‘주3회’(26.5%), ‘주1회’(24.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매일 이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54.5%), 지방자치단체(51.3%), 시·군·구(28.3%)의 순으로 각각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었다.

[그림 3-23] 인터넷 이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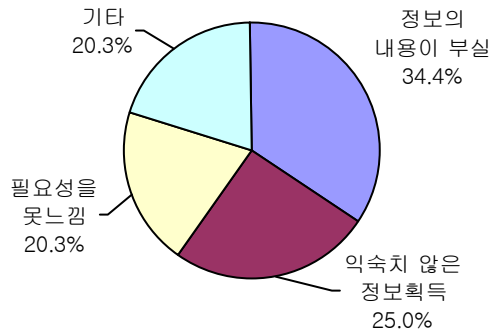


[그림 3-24] 인터넷 이용 횟수(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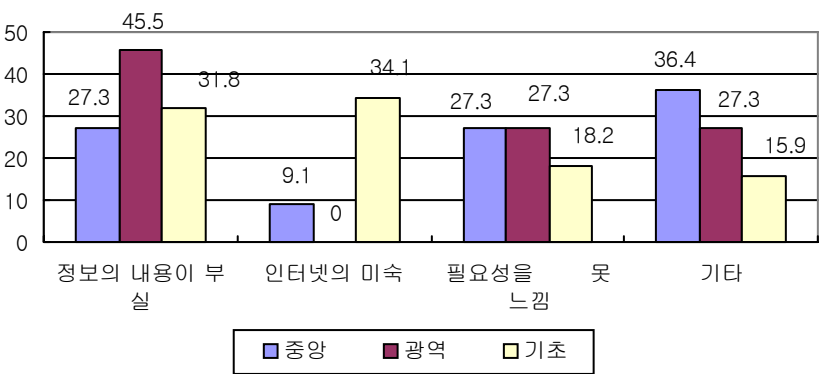
4)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그림 3-25] 온라인 상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부실하다’(34.4%),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25.0%), ‘별 필요를 못 느낀다’(20.3%)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27.3%가 각각 ‘정보의 부실’과 ‘온라인상의 정보이용이 익숙치 않음’을 이유로 들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45.5%가 ‘정보의 부실’을, 시·군·구의 34.1%가 ‘온라인상의 정보이용이 익숙치 않음’을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그림 3-26]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지역별 비교)



여성정책업무관련 인터넷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온라인상의 문의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응답하고 있었으며, 하위기관으로 내려갈수록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으로 갈수록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은 부족하지만 인터넷 활용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내실 있는 여성정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내용 부실’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제공되는 정보의 다양화와 함께 내용의 충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기술교육을 통하여 여성정책담당자들의 온라인상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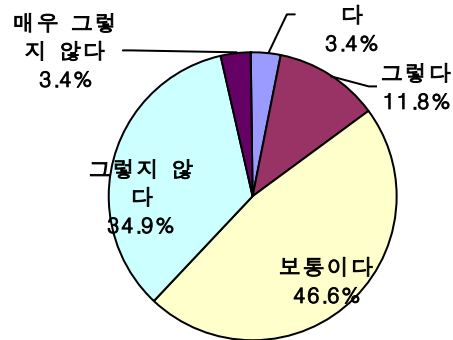
제2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여성정책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현황과 여성정책정보의 관리현황,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여성정책담당자의 인식정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활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에 대한 여성정책담당자들의 기대와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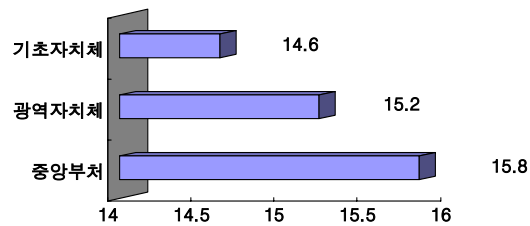
1. 여성정책정보의 공유현황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행정기관과의 정보의 공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가 ‘매우 그렇다’, 11.8%가 ‘그렇다’에, 34.9%가 ‘그렇지 않다’, 3.4%가 ‘매우 그렇지 않다’에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중앙행정기관(15.8%), 지방자치단체(15.2%), 시·군·구(14.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다른 행정기관과의 정보의 공유 정도



[그림 3-28] 다른 행정기관과의 정보의 공유 정도(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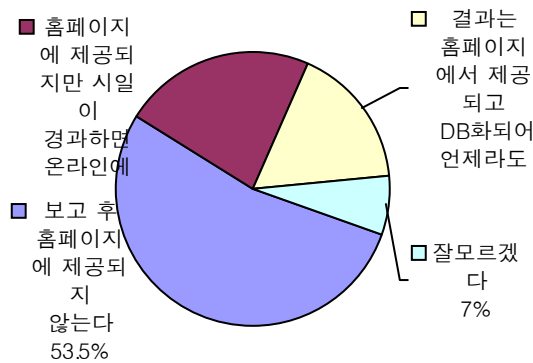


위의 결과로 보아 상당수의 여성정책담당자들이 정보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정보에 대한 불감증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의 공무원들의 인식은 자신의 정보를 지방에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정보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여성정책정보의 공유와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 여성정책정보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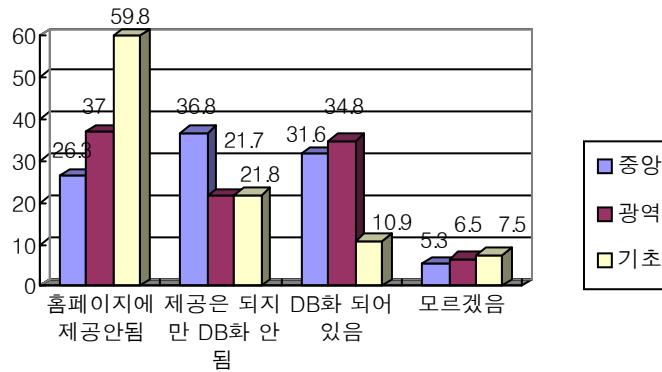
여성정책업무의 수행결과 처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업무수행결과는 보고 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만 일정시일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찾아 볼 수 없다’(22.6%),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DB화되어 언제라도 필요하면 온라인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17.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9] 여성정책업무 수행결과 처리



지역별로 업무수행결과가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고 응답한 경우(제공은 되지만 DB화 안됨, DB화 되어 있음)를 종합하여 보면 중앙행정기관(68.4%), 지방자치단체(56.5%), 시·군·구(3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앙행정기관과 시·군·구는 각각 36.8%와 21.8%가 일정기간 지나면 온라인상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며, 각각 31.6%와 10.9%가 DB화되어 있어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34.8%가 DB화 되어 있어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으며, 21.7%가 일정기간 지나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림 3-30] 여성정책업무 수행결과 처리(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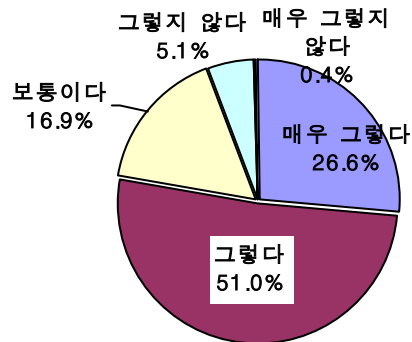
여성정책업무 수행결과의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실제로 여성정책업무수행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지식정보로 축적되어 새로운 정책형성이나 집행과정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은 두 배의 시간과 노력을 별도로 투자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볼 때 중앙의 경우 여성관련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대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보 부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정보의 지식정보화가 잘 이루어진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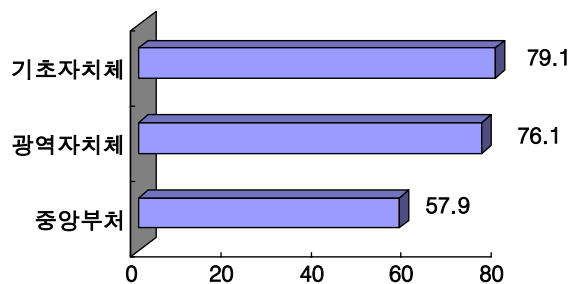
3.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여성정책과 관련한 국가적인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7.7%가 '그렇다'에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57.9%, 지방자치단체의 76.1%, 시·군·구의 79.1%가 '그렇다'에 응답해 시·군·구 단위로 갈수록 국가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



[그림 3-32]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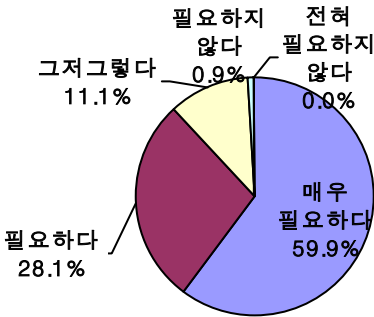
4.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①지방의 정확한 실정 및 통계 ②각 부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시간 정책정보 ③정확한 평가자료 등을 얻기 원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①지역여성관련 통계정보 ②지역별 여성전문인명록 ③ 시도별 수행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정보 ④지방자치단체별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예산정보

⑤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사업 정보 ⑥여성정책관련 연구보고서 등의 정보를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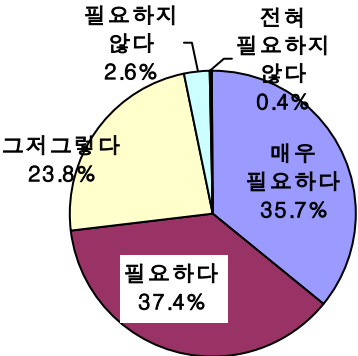
설문조사에서는 여성정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자원으로 ‘문서(사업 계획 및 보고서, 회의록 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8.1%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89.5%, 지방자치단체의 90.0%가, 시·군·구의 87.6%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그림 3-33] 문서정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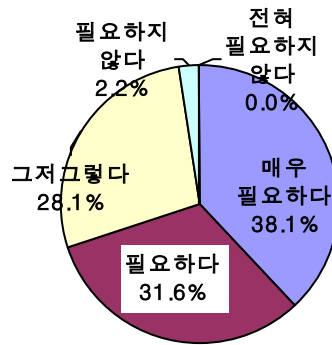
‘간행물(연구보고서, 교육자료, 소식지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1%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68.4%, 지방자치단체의 82.2%가, 시·군·구의 71.6%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림 3-34] 간행물정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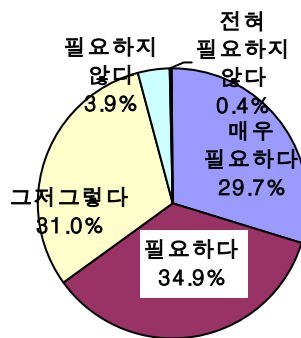


‘동향정보(여성정책현황, 여성계소식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9.7%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50.0%가, 지방자치단체의 75.0%가, 시·군·구의 70.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림 3-35] 동향정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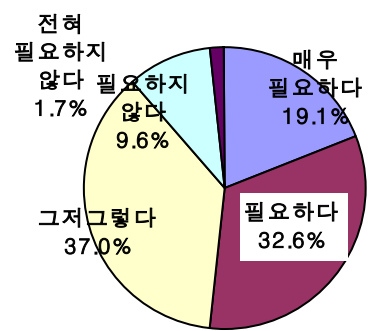
[그림 3-36] 참고정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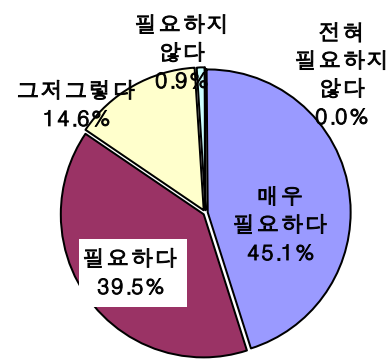
‘참고정보(여성통계, 인명 및 기관정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6%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94.8%가, 지방자치단체의 81.4%가, 시·군·구의 58.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업진행에 필요한 공문양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7%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지역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36.9%만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52.3%가, 시·군·구는 53.5%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림 3-37] 공문양식정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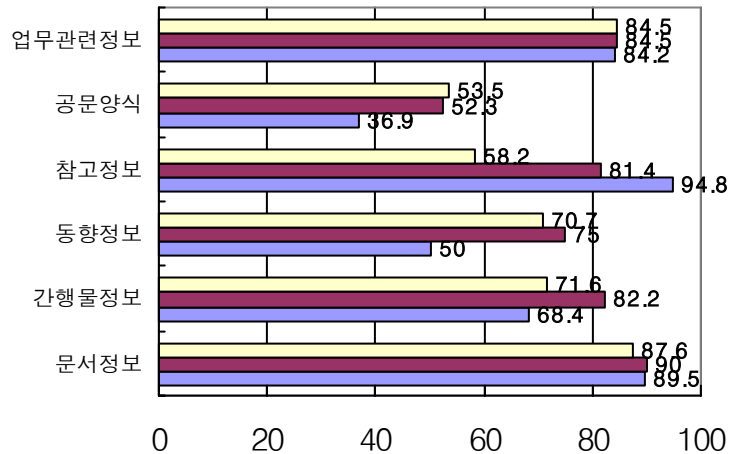


[그림 3-38] 업무관련 경험지식정보의 필요성



‘업무수행 중 취득한 업무관련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6%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지역별로 중앙행정기관의 84.2%가, 지방자치단체의 84.5%가, 시·군·구(84.5%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3-39] 얻고자 하는 정보의 지역별 비교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보자원을 필요정도의 우선 순위로 보면 ‘문서’(88.1%), ‘업무수행 중 취득한 업무관련 지식’(84.6%), ‘간행물’(73.1%), ‘참고정보’(64.6%), ‘사업진행에 필요한 공문양식’(5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참고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94.8%로 가장 높았으며, ‘문서’(89.5%), ‘업무관련지식’(84.2%), ‘간행물’(68.4%), ‘동향정보’(50.0%), ‘공문양식’(36.9%)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서’에 대한 필요성이 90.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업무관련지식’(84.5%), ‘간행물’(82.2%), ‘참고정보’(81.4%), ‘동향정보’(75.0%), ‘공문양식’(52.3%)의 순으로 답했다.

시·군·구의 경우는 ‘문서’가 87.6%로 가장 필요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업무관련지식’(84.5%), ‘간행물’(71.6%), ‘동향정보’(70.7%), ‘참고정보’(58.2%), ‘공문양식’(53.5%)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의 경우는 전체적인 통계자료와 각 하위 기관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은 사업계획 및 보고서, 회의록 등의 문서 업무에 관한 정보의 축적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임을 추측하게 한다. 따라

서 이러한 지역간, 기관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성정책정보의 지식정보화를 통한 정보의 공유 및 교류 활성화와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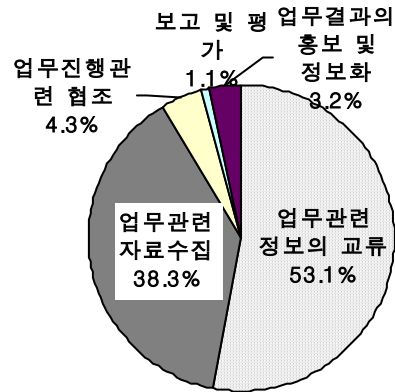
5.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에 대한 기대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에 대한 기대 또는 활용가능성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는 ①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행결과에 대한 부처별, 기관별 실시간 평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 ②각 행정기관간의 의견수렴의 창구역할 ③지방의 여성정책 동향 파악 가능 ④체계적인 정보수집시스템 역할 ⑤공무원간 네트워크화가 가능할 것 등을 기대하였으며, 승진이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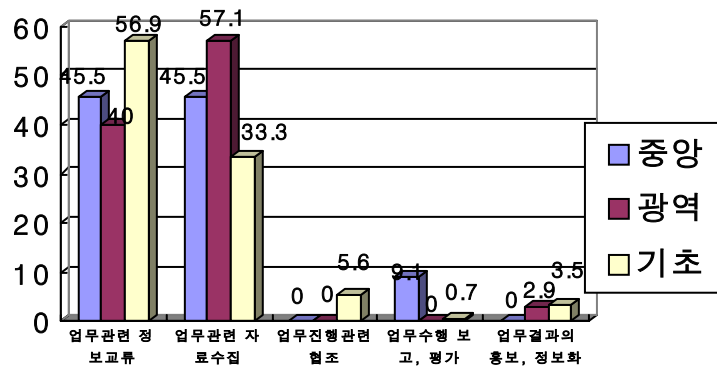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에서는 ①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수집 가능 ②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 등을 기대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통해 가장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3.2%가 ‘업무관련 정보의 교류’를, 38.3%가 ‘업무관련 자료수집’을 기대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5.5%로 ‘업무관련 정보의 교류’와 ‘업무관련 자료수집’을 가장 많이 기대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관련 자료수집’(57.1%), ‘업무관련 정보의 교류’(40.0%)의 순으로, 시·군·구는 ‘업무관련 정보의 교류’(56.9%), ‘업무관련 자료수집’(33.3%) 순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0]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에 대한 기대정보



[그림 3-41]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에 대한 기대정보(지역별 비교)



이처럼 업무관련 정보의 교류나 자료수집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여성정책정보의 지식정보화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층면접 결과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개발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①충분히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확보의 어려움 ②각 부처나 행정기관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③지방정부의 협조 ④개발 후의 운영능력 등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①현재의 업무수행환경에 만족, 기존 시스템 활용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 ②개발 후의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이나 인력확보가 쉽지 않을 것 등을 지적했다.

6.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에 앞서 현재 수행중인 여성정책업무의 내용과 여성정책정보의 수집현황, 여성정책업무관련 인터넷활용현황, 여성정책정보의 관리와 공유현황,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기대, 얻고자하는 정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상의 조사 결과, 여성정책관련 행정기관간의 정보교류가 어렵고, 여성정책추진체계가 비효율적이며, 여성정책정보와 관련하여 지역간 격차를 보이고 있는 등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책업무의 결과가 지식정보로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정책담당자들의 많은 경우가 ‘선행업무의 진행방식과 결과를 참조하여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정보가 폐기되어 정보수집이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현행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정보가 지식정보로 축적되어 새로운 정책형성이나 집행과정에 반영되도록 개발함으로써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정책정보의 내용을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여성정책 업무의 수행에 있어 질 높은 정책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책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수집에 있어 온라인에 의존하는 비율이 큰 지방자치단체나 시·군·구의 여성정책 담당자들이 필요한 여성정책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할 수 있다면 중앙과 지방간의 여성정책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도 해소될 것이다.

셋째, 여성정책정보의 공유와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여성정책업무수행에서의 문제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처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조차 파악이 어렵고, 부처간의 정보교류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실정에 대한 정보부재로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는 중앙위주의 여성정책과제가 하달되는 문제,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파악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기술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정보제공 웹 사이트의 운영이나 관리를 업무담당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여성정책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새로이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인력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필요한 조건이나 이번 조사에서 반수 정도만이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스템의 개발에 따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91

제2절 국외사례

106

제1절 국내사례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내·외부적 정보관리는 현재 각 정부부처에서 행정정보화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지식관리시스템(KMS)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원활하게 운영중인 노동부와 농림부의 지식관리시스템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에 적용, 개발하는데 참고로 하고자 하였다.

1. 농림부

가.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의 개념

농림부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이하여 e-농림행정 구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농림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였다.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은 개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데 모아 공동 활용하여 농업인에게는 수익을, 공직자에게는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다. KMS 구축으로 종전까지 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단위시스템(전자메일, 전자결재, 게시판 등)을 통합한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관심사항에 따른 맞춤형정보서비스가 가능하고, Web Robot을 활용하여 농업관련정보를 매일 자동적으로 검색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농림KMS는 2001년 12월 시스템 구축에 이어 시연회 이전까지 시험 운영 기간 중 국·내외 농업관련정보, 전자결재문서, 신지식농업인정보 등 4만7천 건이 입력되었으며, KMS를 활성화시켜 종이 없는(paperless) 사무실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포함되는 주요 정보내용으로는 전자결재문서, 개인지식자료, 신지식농업인, 해외정보, 농업분야 인물정보, 도서정보, 농업분야 전문용어, 기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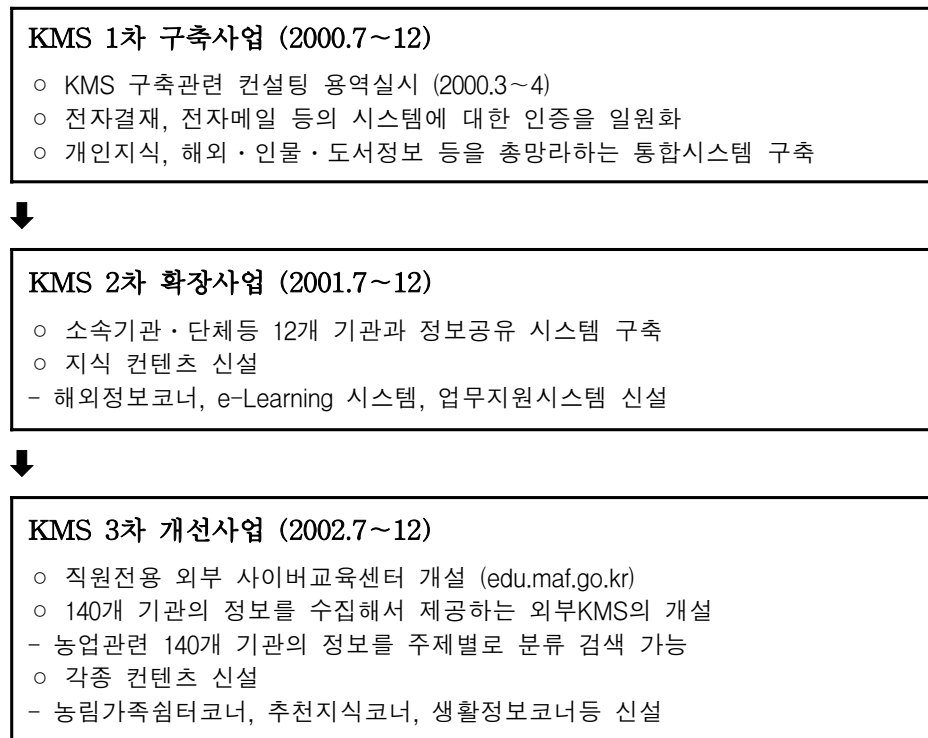
농림부는 2001년 이후 소속 외청(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농업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농림지식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농림관련 민간 기관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농림부 2001).

나. 현황

농림지식관리시스템은 개인별 또는 조직별로 누적된 풍부한 농업관련 자료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여 정보의 지식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식정보화를 통해 부내 사용자들의 지식마인드를 형성하고 전사적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KMS의 추진 현황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농림부 KMS 사업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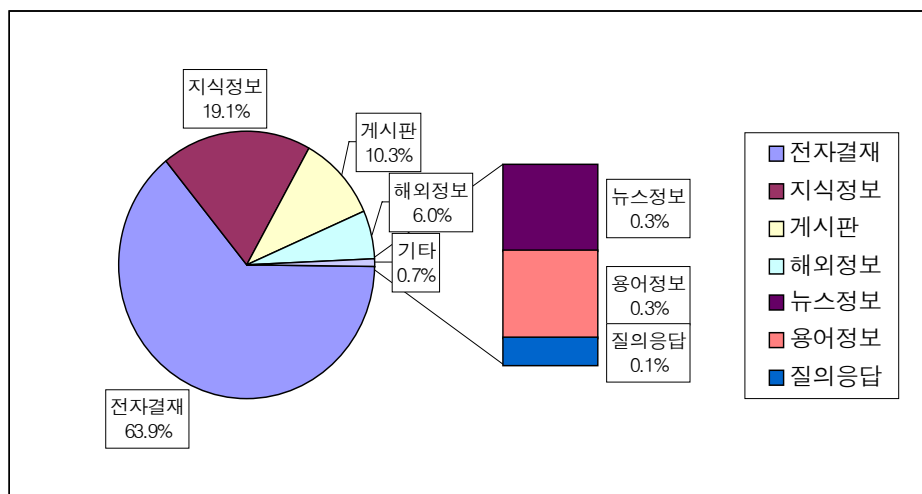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2003). 농림KMS 기능추가개발사업계획.

[그림 4-2] 농림부 KMS 활용분석 1(지식등록 누적건수 2003년 1월 현재)

지식분류	전자 결재	지식 정보	게시판	해외 정보	뉴스 정보	용어 정보	질의 응답	총계
건수	59,800	17,911	9,612	5,601	298	298	94	93,614
백분율	63.8%	19.3%	10.2%	6%	0.3%	0.3%	0.1%	100%

※ 전자결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4% 차지
 ※ 농림부 본부의 지식등록건수 : 총 17건
 * 농관원 2건, 수과원 5건, 연수부 9건, 산림청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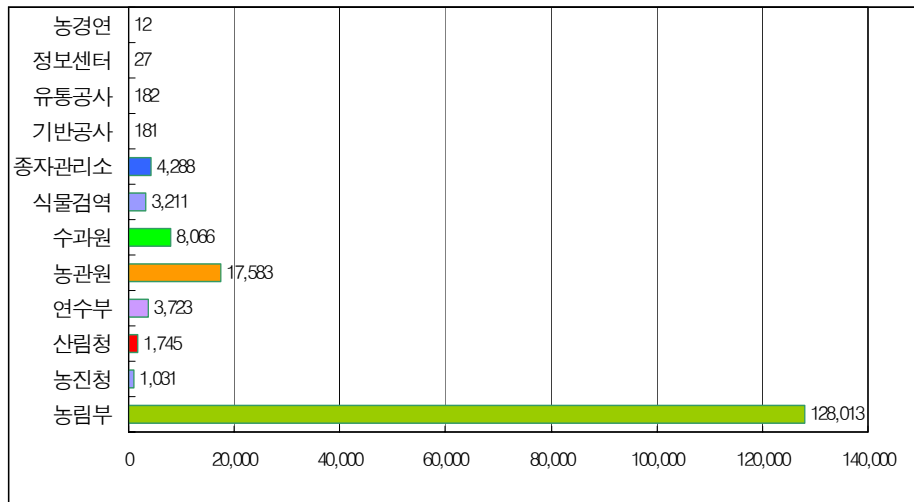


*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2003).

[그림 4-3] 농림부 KMS 활용분석 2(2002년 기관별 접속자 누계)

기관명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연수부	농관원	수과원	식검	종자관리소	기반공사	유통공사	정보센터	농경연	총계
접속자수	128,013	1,031	1,745	3,723	17,583	8,066	3,211	4,288	181	182	27	12	168,062
백분율	76%	0.6%	1%	2.2%	10.4%	4.7%	2%	3%	0.1%	0.1%	0.01%	0.007%	100

※ 농림부 본부 위주(76%)의 접속빈도를 보임, 특히 정보센터, 농경연 등의 접속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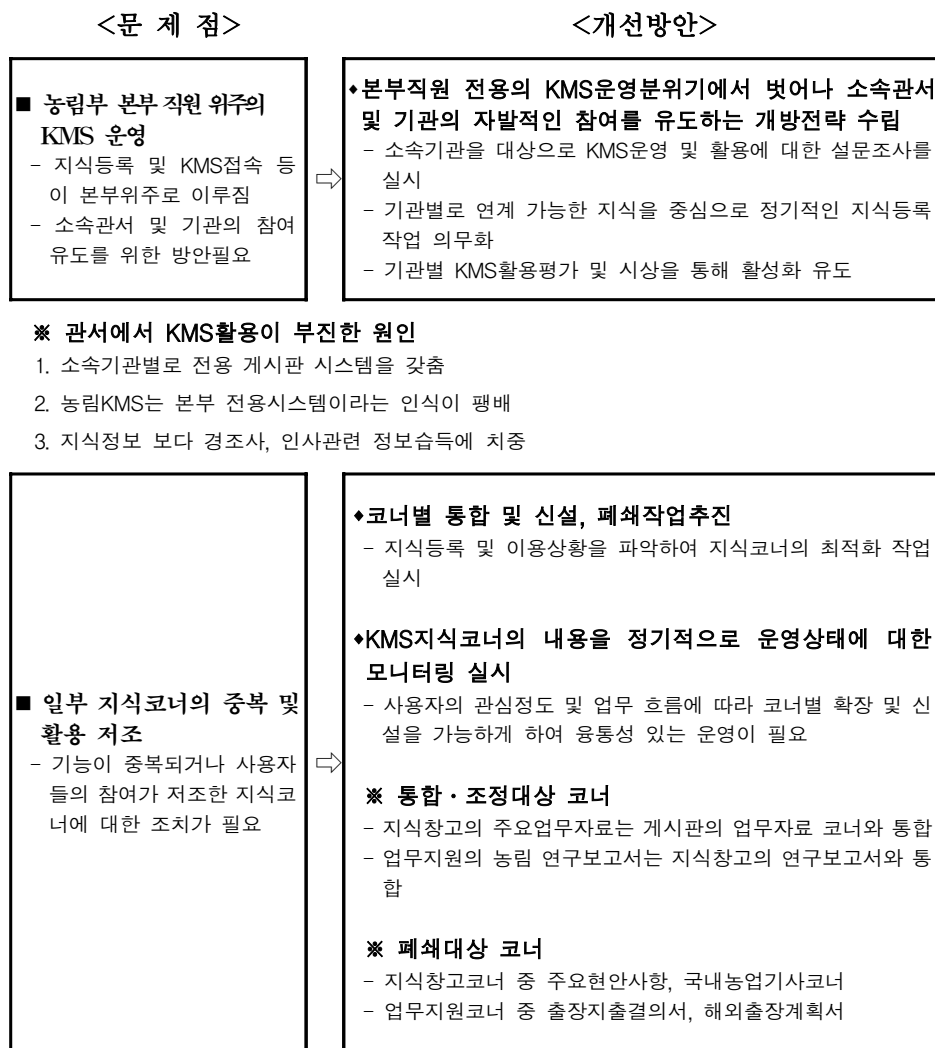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2003).

농림부의 지식관리시스템은 현재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높은 생산성을 구현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림KMS를 중심으로 생산적 정부구현분야 평가에서 전 부처 중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91.44점/100점), 계속해서 농림부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필두로 통합 인트라넷 구축을 통해 농정의 지능화를 구현하고 있다.

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림KMS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그림 4-4]과 같다.

[그림 4-4] 농림KM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 농림부, 2003. 2003년 농림KMS 기능추가개발사업계획.

농림부KMS의 2003년 주요개편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멀티미디어 기능중심의 동적인 홈페이지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 텍스트 위주의 화면내용을 화상, 이미지 등 동영상 위주의 동적인 홈페이지로 개선하고,

두 번째, 사용자 편의성 위주의 홈페이지 구성을 위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초기화면의 길이를 조정하고, 초기화면 메뉴구성의 단순화로 효율적인 자료검색을 유도하며,

세 번째, 자료의 현행화를 통한 적시성 제고를 위하여 농정이슈, 농정초점코너 등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자료의 현행화 및 신속성을 위하여 수시 개편체제를 구성하였다.

이에 신설된 콘텐츠는, 멀티미디어 사이버 농정홍보 코너(사진으로 보는 농정, 동영상 자료실, 농업관련기사)와 떡 관련 전문코너 신설, 어린이농업교실에 학습지원 콘텐츠 신설 등이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농림부는 홈페이지 개편내용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1) 농림KMS의 활성화 방안

농림KMS의 활성화 방안으로 농림KMS의 사용자 평가 및 시상, 지자체 농정 공무원의 KMS 사용권한 부여, 소속관서의 주요DB와 농림KMS와의 상호연계 추진 등이 있다.

① 농림KMS에 대한 평가 및 시상

농림KMS의 평가 목적은 부내 KMS사용자를 대상으로 KMS지식등록 및 활용 상태를 평가하여 시상함으로써 KMS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2000년 6월 농림KMS 오픈 이후부터 2003년 9월30일까지 사용자가 등록한 모든 지식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적인 평가시상을 통하여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개인별 시상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평

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상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② 지자체 농정공무원의 KMS 사용권한 부여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는 농림부의 농정시책을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농정담당공무원들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농림KMS를 통하여 농림부와 지자체 농정담당 공무원들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이다.

③ 소속관서의 주요DB와 농림KMS와의 상호연계 추진

소속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지식 및 DB에 대해서 농림 KMS와의 연계를 추진하여 모든 KMS사용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DB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서 농림KMS내에 소속관서의 주요 DB를 연계한 지식코너를 신설하고 조회, 검색 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2) 농림KMS의 추가개발내용

① 지식동호회 기능

- 정책, 취미, 학습,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 운영
- 네이버 지식동호회, 해양수산부 동호회, 다음카페 수준이상의 기능구현

② 지자체관련 업무지원코너 신설

- 단계적으로 전국 도, 시, 군과 연동
- 지자체 연결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방안수립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관련 있는 업무의 지식공유를 유도

③ 주요업무 지시사항 진도관리 코너신설

- 대통령, 장관 지시사항 관리코너
- 각종 주요 지시사항을 코드화시켜 관리하고 진척관리를 위한 업무절차를

단축시키면서 효율 추구

④ 메신저 기능구현

- 개인별, 그룹별 통신 및 자료 송·수신 기능구현
- 산업자원부, 특허청 수준 이상
- 전자메일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시간 통신을 통한 업무효율증가
- 지식동호회의 기능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유발

⑤ 생활정보코너 보완

- 사용자 위주의 정보 제공 및 평가 체제로 전환
- 현재의 나열식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사용자들이 평가하고 자료를 게시하는 형태의 생활정보코너 운영
- 각 실국과의 서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음식점 정보 등의 자발적 게시 및 평가를 유도

⑥ 지식도우미 코너신설

- 각종 질문,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지식제공체제 운영
- 네이버 지식iN코너를 벤치마킹하여 구축
- 성숙된 부내 지식공유 문화를 바탕으로 고급화된 지식의 축척과 공유를 유도
- 우수답변자와 지식왕 선발 등 평가와 시상을 통해 활성화 유도

⑦ 게시판 기능보강

- 게시자 사진등록 기능 등 보강
- 사진 로드기능과 함께 충분한 사진 정보원(source) 확보 (PPSS)
- 지식동호회의 기능과 연계하여 운영

⑧ 해외정보, 국회정보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완

- 충분한 자료가 구축된 국회정보와 해외정보에 대한 UI(사용자 접근 환경) 개선차원의 개발
- 사용자 중심의 질의, 검색기능과 인식성을 높여서 지식의 활용 배가 유도

⑨ 공용 드라이브 기능구현

- 현재 사용중인 N-드라이브를 KMS와 연계
- 활용가치가 높은 공용드라이버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의 높아지고 있고 축적된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가 필요.

현재 농림부KMS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게시판의 주요코너, 업무지원의 국회관련, 지식창고의 해외출장자료, 지식포탈의 최근지식코너 등이고,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문은 지식포탈의 토론마당, 연구보고서, 사이버교육, 해외정보코너, 지식통계코너 등이다.

앞으로 조정이 필요한 코너는 지식창고의 주요 업무자료를 게시판의 업무자료 코너와 통합하고, 업무지원의 농림연구보고서를 지식창고의 연구보고서와 통합하는 것이다. 폐쇄될 부분은 지식창고의 주요현안사항, 국내농업기사코너, 업무지원코너의 출장지출결의서, 해외출장계획서 등이다. 한편 새로 추가한 콘텐츠는 이 주일의 추천지식코너, 생활정보마당, 사이버 토론마당, 지식마일리지, 전자결재요약코너, 농업기사검색코너 등이다.

[그림 4-5] 농림부KMS 초기화면



2. 노동부

가. 노동부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념

노동부는 소속 공무원의 지식 창출을 활성화하고 지식의 공동활용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굴된 지식의 체계적인 축적·관리 및 지식활동에 대한 평가·보상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지식”은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수집, 생산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말하며, 업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안, 보고서 등의 행정문서, 경험, 사례, 논문 등을 포함한다. “지식지도(Knowledge Map)”는 지식을 일정유형에 맞게 유형별로 분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표 또는 서식을 말한다. 종합하여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의 획득과정에서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 및 새로운 지식의 창출 등 지식의 전체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지식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노동행정 업무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반시스템 체계를 말한다.

나. 현황

노동부 KMS의 지식의 대상으로는 기안, 보고서 및 계획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지식, 업무와 관련된 자유제안 및 아이디어,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업무관련지식, 성공·실수 사례, 기타 업무 외의 생활 경험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지식 및 아이디어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 KMS 운영체계의 각각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관리관: 기획관리실장

-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지식관리시스템과 관련되는 업무 총괄 등

② 지식관리시스템관리관: 행정정보화담당관

- 지식관리시스템의 서버 및 프로그램 운영·보완 등 시스템 총괄 관리
- 지식지도(Knowledge-Map) 및 지식사용자 관리
- 등록지식 및 마일리지 관리
- 지식활동 평가 및 포상 관리
- 기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등

③ 부문지식관리관: 조직기능별 부문지식의 해당 국장(단,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는 총무과장)

- 조직기능별 부문지식과 관련되는 업무 총괄
- 지식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업무
- 부문지식관리보좌관 지정 및 변경 등

④ 부문지식관리보좌관: 부문지식관리관이 속한 각 국의 주무과장(단, 기획관리실 및 총무과는 주무계장)

- 부문지식관리보좌관은 담당하는 지식폴더에 생성된 지식을 평가하여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만기지식에 대한 보존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부득이한 경우 실·국 소속의 각 과장과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 가능

⑤ 지식관리 담당자: 각 실·국의 주무(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실무를 수행)

- 부문지식관리보좌관을 보좌하며, 실·국의 지식관리 실무업무를 수행
- 지식지도 및 사용자 관리
- 사용자들의 지식활동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기타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수행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국 소속의 각 과 주무 담당자와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 가능

⑥ 사용자: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및 각 기관의 소속 직원(지식의 등록요청, 지식활용 및 타인이 등록한 지식을 평가)

다. 지식활동 우수자 선정계획

노동부의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2002년 11월 동 시스템을 시범운영하였으며, 2003년 6월까지 시스템을 운영해본 후 보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식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완료한 후에 변경된 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종합적인 지침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지식활동 우수자, 우수지식 및 우수기관 등의 선정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노동부, 2003).

정책정보전달시스템 또한 인센티브 없이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기에 한계가 있을 것임이 명백하다. 별도의 법·제도적인 강제성이나 금전적, 물질적인 포상 및 정신적 보상의 측면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내실 있는 지식관리체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1) 지식활동우수자의 선정내용

지식활동 우수자의 선정시 고려사항으로는,

첫 번째, 지방관서(각 위원회 포함) 사용자들의 등록지식에 우대조치,

두 번째, 모든 평가시 업무지식을 위주로 우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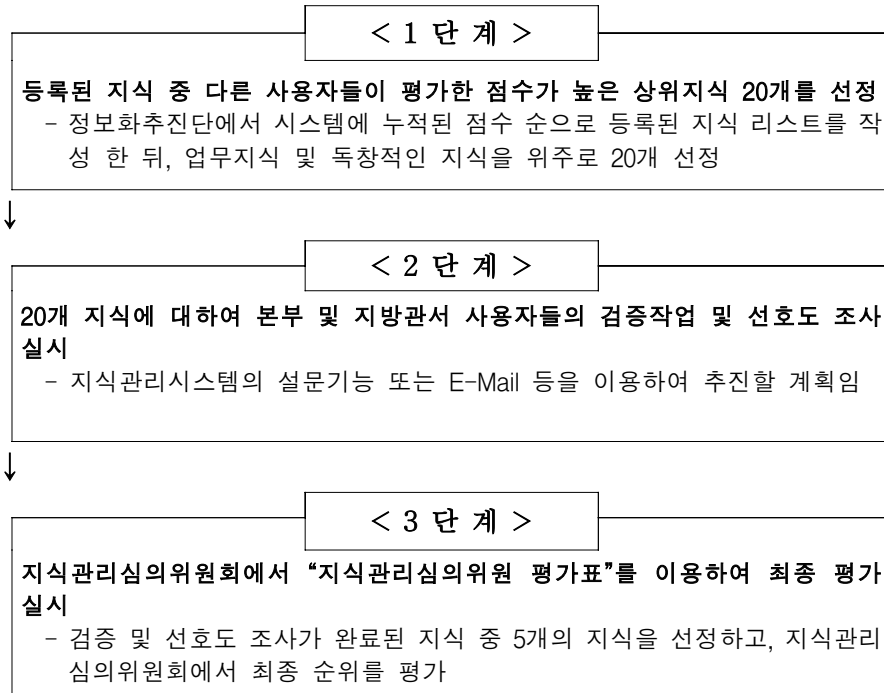
세 번째, 시스템 자체적으로 평가·관리되는 개인별 마일리지는 일반/업무 지식의 구분 평가가 반영되지 못하므로 평가기준에서 제외,

네 번째, 동일인이 중복선정이 되는 경우 상위등급에 대하여만 수상대상으로 하고, 후순위자를 당해 분야 수상자로 결정하는 것 등이다.

평가는 평가대상 기간 중 시스템에 등록된 지식의 수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업무관련 지식은 산정시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방관서의 경우 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지식의 비중이 낮으므로 업무지식에 한하여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우수지식과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그림 4-6] 우수지식 선정절차



우수기관 선정은 2개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관서별 등록지식 대비 현원으로 나누어 순위를 결정한다. 업무관련 지식은 산정시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방관서의 경우 업무지식에 한하여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2) 인센티브 제공방법

지식활동 우수자 및 우수지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관련예산(포상금)의 미 확보로 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다.

각 개인별에게는 지급금과 동일하게 상품권을 구입하여 2003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표 4-1> 포상금

(단위 : 원)

항 목		금 액	비 고
지식활동우수자	최 우수	150,000 * 1 = 150,000	
	우 수	100,000 * 2 = 200,000	
우수지식	최 우수	300,000 * 1 = 300,000	
	우 수	200,000 * 2 = 400,000	
우수기관	우 수	500,000 * 2 = 1,000,000	
2003년 소요 예산		2,050,000	

최우수 지식 선정자에 대한 추가 우대사항으로는 지식관리시스템 초기화면을 이용하여 선정된 지식 및 해당자를 일정기간 홍보하고, 장관상 후보자로 추천하며, 해외단기연수대상자로 추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3. 시사점

노동부와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사례에서, 농림 KMS의 활성화 방안 중에서는, 지자체 농정담당 공무원들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위해 지자체 농정공무원에게 KMS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관련 업무지원 코너 신설 등이 들어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업무의 지식공유를 유도하고 특히 지자체와의 연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국 도·시·군과도 연동하려는 계획은 여성정책의 유기적 협조체계구축을 위하여 벤치마킹의 대상이라 생각된다.

노동부의 경우는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또한 인센티브 없이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기에 한계가 있을 것임이 명백하다. 별도의 법·제도적인 강제성이나 금전적, 물질적인 포상 및 정신적 보상의 측면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내실 있는 지식관리체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국내사례로 제시된 농림부나 노동부의 경우는 각각 전국적으로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어 KMS의 운영이 원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은 우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를 중심으로 네트워

크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정보가 생산되는 곳이 중앙의 여성부나 여성정책담당관실, 지방의 여성정책과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확장된 여성정책정보의 전달시스템 구축이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또한 농림부나 노동부의 시스템은 정책담당자들 뿐 아니라 농촌진흥청, 농민, 노동상담소 등 관련 정책정보를 공유할 대상을 관련 기관이나 개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본 연구의 범위가 여성정책담당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기관, 여성 개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제2절 국외사례

농림부와 노동부의 사례가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시스템적 체계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면, 호주의 사례를 통해 여성정책정보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기관과 네트워크를 이루며 여성정책정보들을 공유하고 유통하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여성정책정보의 내용적 측면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1. 호주의 여성정책정보 네트워크

호주의 여성정책정보 네트워크는 호주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에 관한 국가 정책 관련 정보에의 용이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정보네트워크이다. 호주 여성지위국(The Commonwealth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OSW)이 연방 정부의 2001~2002년 예산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이 네트워크는 호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략적 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광범위한 "사용자중심 포털 프레임워크(Customer Focussed Portals Framework)"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실천과제의 하나이다.

호주의 여성정책정보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은 호주 전역의 여성 관련 기관 및 웹 사이트에 산재해 있는 방대한 양의 온라인 정책정보, 서비스, 정보자원을 단일 웹 사이트 상에 수집하여 접근의 용이함과 탐색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함으

로써 여성 정책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관련 정보자원에 대한 디렉토리를 단일 웹 사이트상에 구축하여 정책 정보 탐색 과정을 단순화 한 여성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여성지위국은 향후, 이 정보네트워크에 연방 정부의 온라인 정보자원과 특정 주(state나 territory) 정부의 온라인 자원을 연결하여 기존 정보자원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음으로 국가적인 여성정책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향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머지 주 또는 지방자치 정부의 자원, 지역사회 정보자원까지도 정보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단계적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웹 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자원으로는, 여성 관련 주제별 정보원 디렉토리와 최신 소식, 국내외 행사 정보 등이 있다.

소식 정보는 여성 정책 관련 최신 뉴스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해당 소식과 관련된 상세한 전문 내용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로 링크되고 있다.

또 행사 정보는 2003년 1월 이후의 각종 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각 행사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행사 내용에 따라 주제별, 날짜별, 장소별, 행사 성격별로 정보를 분류함으로써 특정 정보의 검색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에의 접근 기준은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된다.

- 장소별 하위구분 : 수도를 중심으로 한 주요 주의 도시 지역,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지역, 퀸스랜드(Queensland), 남 오스트레일리아, 타스마니아, 빅토리아, 서부지역, 국가 및 국제 행사, 세계 정보.
- 행사성격별 하위구분 : 회의, 의회, 축제, 포럼, 국제 행사 또는 기념일, 만찬, 모임, 국경일, 국가적 기념 주간 및 달, 세미나, 워크숍.
- 주제별 : 예술문화, 공로 및 업적, 개발, 성 평등, 가족, 글로벌 이슈, 건강, 역사, 법과 정의, 리더십, 스포츠, 정책 연구, 노동, 여성폭력 등.

이러한 행사 정보는 사용자로부터의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해 누구든지 여성관련 이슈들에 대한 최근 행사 정보를 홍보 입력할 수 있으며 행사 정보로서의 관련성, 정보의 최신성,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통해 게시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주요 정보자원인 여성 정책 정보는 전국에서 19개 다양한 주

제별로 수집되며, 다시 하위 주제로 세분화 되어 해당 정보자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보를 제공하고, 본래의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통해 상세 정보를 검색하도록 되어 있다. 19개 주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개발, 건강 및 복지, 법, 정의, 평등, 폭력과 인권유린, 가족관계, 노동 및 고용, 교육 훈련, 경제 및 금융, 문화, 지역사회 및 스포츠, 여성 원주민, 레즈비언, 이민 여성 및 다문화적 여성, 여성 노인, 농촌, 지역 및 원거리여성, 장애여성, 젊은 여성, 지원 및 서비스, 연구 및 통계, 모금활동 및 정부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개 정보에서는 해당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명, 그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형태(format)와 정보량(Kbyte)을 안내하고 있다.

2. 호주의 여성네트워크

호주의 여성네트워크는 현재 호주지방정부여성협회(The Australian Local Government Women's Association; ALGWA)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ALGWA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 그 아래 The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ocal Government Managers Australia, The National Office of Local Government, The Commonwealth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이 설립되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Queensland, Victoria, New South Wales, Tasmania, Western Australia, South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별로 ALGWA가 설립되어 있다.

또한 총 138개의 지방의회(council, shire, city)가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8개의 정부 부서⁸⁾와 16개의 지방정부 대표 협의회⁹⁾, 그리고 4개의 이익단체¹⁰⁾가

8) ACT Urban Services Department, Commonwealth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New Zealand, National Office of Local Government,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Queensland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 Planning, Queensland Premiers Department, Victorian Local Government Division (Infrastructure Department).

9)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ustralian Local Government Women's Association New South Wales, Australian Local Government Women's Association Queensland, Australian Local Government Women's Association Tasmani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Women's Association Victori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the Northern Territory,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여성 네트워크 중 NGO 단체간의 네트워크는 Australian Women Working Together (AWWT)에서 총괄하고 있다. Australian Women Working Together (AWWT)는 OSW에서 만든 출판물로 호주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여성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여성자료와 NGO에 관련된 네트워킹 기술 등을 공유한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는 1999년 현재 총 57개에 이르고 있다.

국립농촌여성연합(National Rural Women's Coalition)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농촌여성연합은 국립사무국(National Secretariats)중 하나로서 2002년에 만들어졌으며, 호주농업여성재단(The Foundation for Australian Agricultural Wome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주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장(link)을 제공한다. 그리고 호주의 농촌에서 여성은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 기구는 그들에게 의사결정과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제공한다.

자문기관으로 Committee of Commonwealth와 State Women's Advisers는 정보공유와 주-지방정부에서 여성의 활동을 견고하게 다지는 전략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지방정부별로 각 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1년에 4차례 자문위원회가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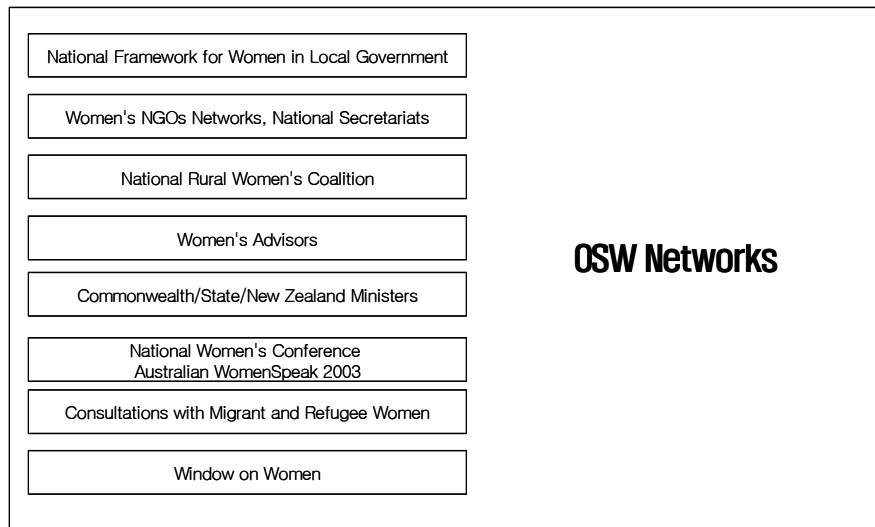
기타 여성회의의 형태로서 'The Second Australian Women Speak 2003 Conference'가 개최된다. OSW의 주최로 열리는 회의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여성이 참여하여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of Queensl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Tasmania, Local Government Managers Association National Council, Lord Mayor of Brisbane's Women's Advisory Committee, Municipal Association of Victoria, New South Wales Local Government and Shires Association, Victorian Local Governance Association, Western Australian Municipal Association, Women's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Coalition.

- 10) Australian Pensioners and Superannuation League Qld Inc, Margaret River Business Development Centre, SOLGM OPUS Business School New Zealand, Results Unlimited Pty Ltd.

이상과 같은 호주의 여성네트워크의 체계는 [그림 4-7]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7] 호주의 여성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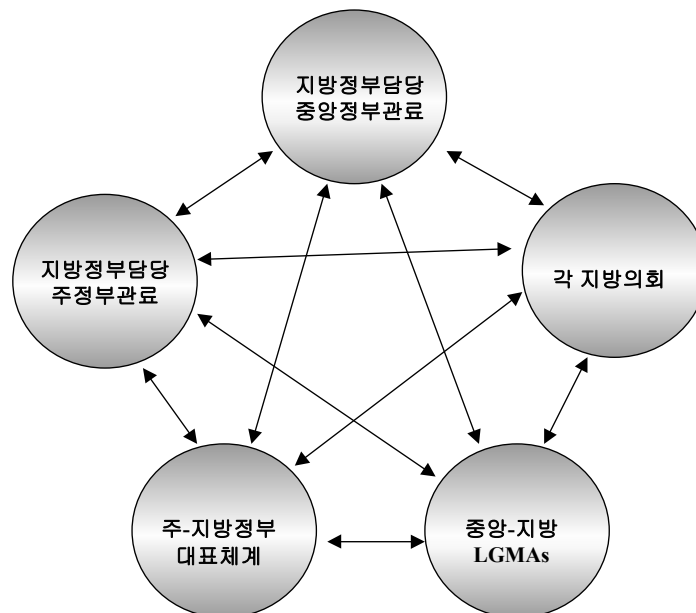
3. 호주의 지방정부 네트워크

호주의 여성정책은 실제로 주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정부의 여성정책 기구는 국내외의 정책지침을 근거로 주요사업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즉,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1951년 캔버라(Canberra)에서 설립된 호주 지방정부 여성협회(Australian Local Government Women's Association; ALGWA)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지방정부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ALGWA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정부간 여성참여의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틀(framework)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은 각 지방의회, 지방정부 담당 주정부 관료, 지방정부담당 중앙정부 관료, 주-지방정부 대표 체계, 지방-중앙 LGMA's

로 이루어져 있다. 네트워크의 목적은 선거에서의 당선과 요직으로의 배치, 민간기업의 간부·CEO 진출을 통한 참여 증진 등이며, 하위 목표로는 여성의 참여를 위한 경험, 기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회와 공동체 구성, 성희롱·차별에 대한 논의, 지방의원, CEO 및 중역 관리자의 지지 확보, 여성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은 [그림 4-8]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호주의 여성정책의 『적 네트워크체계로 나타내보고자 한다.

[그림 4-8] 호주의 지방정부간 연계모형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주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면 <표 4-2>과 같다.

<표 4-2> 주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

일반적 행동	조직적 보조(organizational support) 여성 네트워크의 발전(development of woman's networks) 지방정부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local government)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 : 장애, 문화적·언어적 차이, 원주민
선출된 임원	선거전의 보조(pre-election support) 선출된 임원 훈련(elected member training) 권리(entitlement) CEOs/General Managers forum에서 실질적 역할 제공
여성직원 보조	멘토링과 인식(mentoring and recognition) 훈련(training)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

<표 4-3>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

a. 선출된 여성 지원을 위한 의회의 역할	<p>지방정부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local government) : 청년의회 설립을 통한 젊은이의 의회 의사결정 참여와 직업선택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능력 향상</p> <p>선거전의 보조(pre election support) : 여성 당선자를 위한 지방시스템 구축과 기존회원과 신입회원을 위해 임시회의 운영</p> <p>회의시간(meeting times) : 의회의 회의 시간의 보증</p> <p>선출된 임원 훈련(elected members training) : 여성의 동등한 훈련기회 확보</p> <p>멘토링과 보조(mentoring and support) : 멘토링은</p> <p>① 여성들의 직업의식 제고 ② 다양한 여성 역할모델 제공</p> <p>③ 젊은 여성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 기회 확대</p> <p>④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유대 강화</p> <p>⑤ 젊은 여성들의 아이디어 표출 및 상담 기회 제공</p> <p>⑥ 젊은 여성들의 심리적·사회적·정서적 문제에 대한 유경험자들의 조언 및 지지 체계 구축.</p> <p>즉, 지방정부간 멘토링을 통한 의식 구축과 성희롱방지 정책 개발.</p> <p>권리(entitlement) : 선출된 임원에 대한 권한 제고.</p> <p>행정(administration) : 정부와 민간기업의 중역에 참여여성 보조</p> <p>균등한 기회문제(equal opportunity issues) :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적, 언어적 인식 훈련 제공.</p>
b. 의회를 위한 CEO/General Manager의 역할	<p>멘토링(mentoring) : 새로운 리더와 젊은 여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 여성의 성공을 위한 인식프로그램(recognition program)소개, 새로운 리더를 위한 리더십 소개.</p> <p>훈련(training) : 현재 훈련 기회에서 여성의 동등참여 보장, 여성훈련을 중점적으로 한 참여 촉진, 여성의 배경에 차별받지 않는 훈련 촉진</p> <p>선출과 승진(selection and promotion) : 여성의 선출, 승진을 보조</p> <p>기회균등(equal opportunity)</p> <p>여성네트워크 발전(development of women's networks)</p>

이 외에 국가(national)수준에서의 전략은 국가운영위원회(the national steering committee)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지원, Data의 수집과 출판, 노후에 대한 준비대책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 주,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여성정책, 여성관련 전략은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각 전략의 실행과 정보의 전달 통로로서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4. 시사점

간 연계적으로 이루어진 호주의 여성정책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의 단편적·수직적 여성정책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현재의 수직적인 계층제적 정부구조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둘째, 네트워크 구축에 여성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셋째, 젊은 여성 - 예비 여성 정치인 - 여성 정치인 - 여성 관료 - 여성 NGO 단체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정보의 공유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간의 여성정책정보의 공유는 주로 여성정책기본계획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나마 실시간으로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보다는 지역내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는 거의 서로 공유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각 지방정부간의 여성정책정보 공유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네트워크 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의 여성정책관련 담당자들간의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은 여성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호주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큰 목표아래 중앙의 여성지위국(OSW)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호주는 6개 주의 연합체이며 각각 연방의회와 각 주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은 국내의 정치와 대외관계를 스스로 장악하는 완전한 독립국이다. 연방정

부와 각 주는 각기 헌법1·의회(입법부)·행정기관(행정부)·사법기관(사법부)을 가지고 있는데, 연방과 주의 관계는 미국의 경우와 흡사하다. 연방의회의 입법권은 헌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각 주의 입법권이 강력하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각 지방정부는 거미줄처럼 얽여있어 네트워크 구축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 사용자중심으로 운영되며, 각종 여성정보가 제공되고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에서도 적용가능하다. 즉 여성정책담당자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각 사용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여성정책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밖에 호주는 지방정부간 뿐 아니라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도 활발하며, 아직은 링크의 기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지만 뉴질랜드와 같은 이웃 국가와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정책담당자 간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여성정책정보에 대한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 나아가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지역의 국가간 네트워크에 관해서도 향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방향

제1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모형	117
제2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방안	124

여성정책은 중앙의 여성부를 중심으로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정책 목표로 하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근간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제시되고 있다. 원활한 협조체계는 동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특히 중요한 전략이다.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형식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 이행 평가가 없는 단순한 실적의 취합, 그리고 타 기관 뿐 아니라 동일기관에서도 연도별 실적 비교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제2차 기본계획은 정책추진 기관 간 정책협력을 토대로 추진되고, 기본계획의 추진경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제 하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 정보관리의 필요성과 정보시스템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관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조직의 정보운영 실태 및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모형과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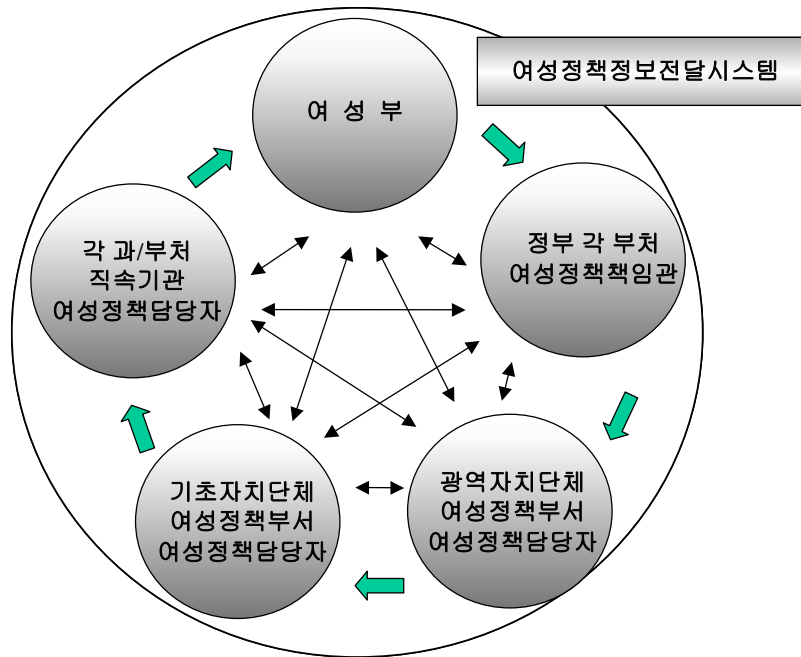
1.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

중앙부처에서는 타부처·실국, 지방정부에서는 타 지방정부·과 간에 정보의 교류가 부족하여 업무가 중복되고 집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정책관련 정보는 현재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소

떨하고 있다. 따라서 DB화하여 공유와 활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은 중앙과 지방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계자료 혹은 정책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경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시행 계획과 실적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정보는 축적하여 활용할 것이다.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구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보교류 형태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이 보여주듯이 전달시스템 상에서 여성정책정보들은 각 주체들 상호간에 ̎적으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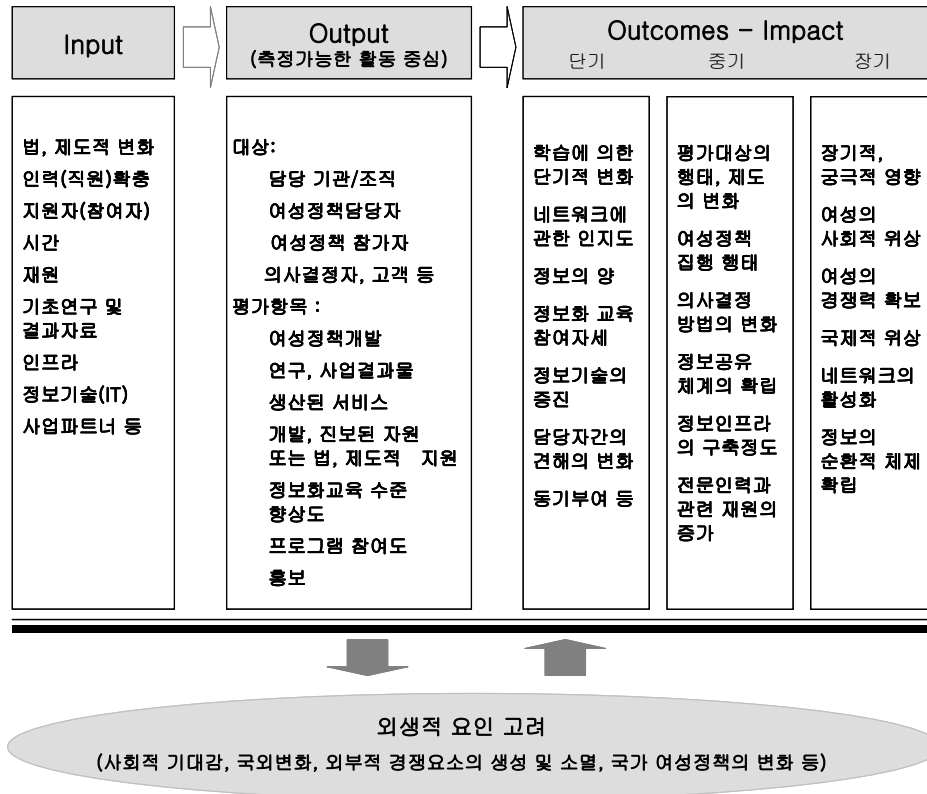
2.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전략

설문조사, 면접조사, 사례연구 등의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정책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방향 모색이라 하겠다.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은 여성정책 및 업무가 추구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견인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과 업무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의 모형은 타분야의 정보화 경험들을 참고하여 주요 성공적인 관리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기존의 여성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추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전략으로서 정책추진에 있어서 설정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산출물(목표달성정도)을 점검하여 환류시키는 정책에서의 평가과정 관리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 즉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s), 그리고 영향(Impact)의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관리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각 단계에 따라 성과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산출을 측정하고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과정관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2]는 이러한 과정을 포괄하여 그린 것이다.

[그림 5-2]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전략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개발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시작 단계인 투입단계에서는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관리자의 확충과 자원 투자를 통한 정보의 관리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의 사전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파트너로서의 기업의 역할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투입된 노력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측정가능한 산출물(Output)이다. 측정대상에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중앙과 지방정부기관의 조직과 담당자가 포함된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혜자 등의 고객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사업의 결과물, 생산된 서비스의 양, 변화된 법·제도적인 측면, 정보화 교육의 수준향상도,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수, 언론을 통한 시스템의 광고적 효과 등이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에 단기적으로 변화의 측정이 가능한 인지도, 정보의 양적인 증가율, 담당자들의 활용자세의 변화, 견해의 변화 등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의사결정 행태, 정보인프라의 총체적 구축 정도, 교육에 의한 전문인력의 증가, 효과적 활용에 의한 재원의 증가 등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보시스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경쟁력,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활성화 등을 측정하여 시스템의 안정을 추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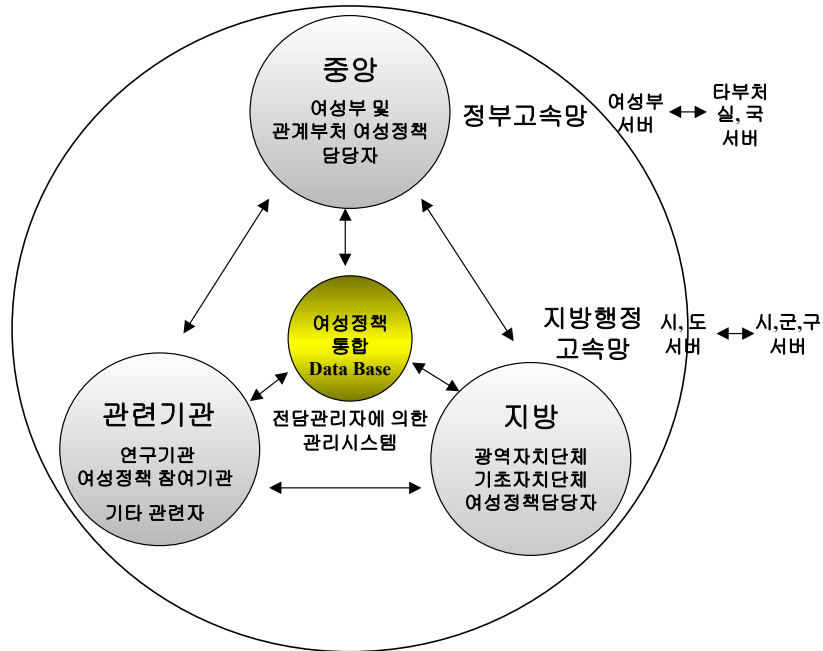
또한 외부적 요인, 국제적 환경의 변화, 정보·기술의 변화, 여성정책의 국가적 기본 방향의 변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평가와 연결된 전략 단계를 통하여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모형 및 활용방안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운영 모형은 [그림 5-3]과 같다. 여성부와 관련부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을 연결하는 여성정책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중앙에는 여성정책 통합DB관리시스템이 존재하게 된다.

[그림 5-3]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운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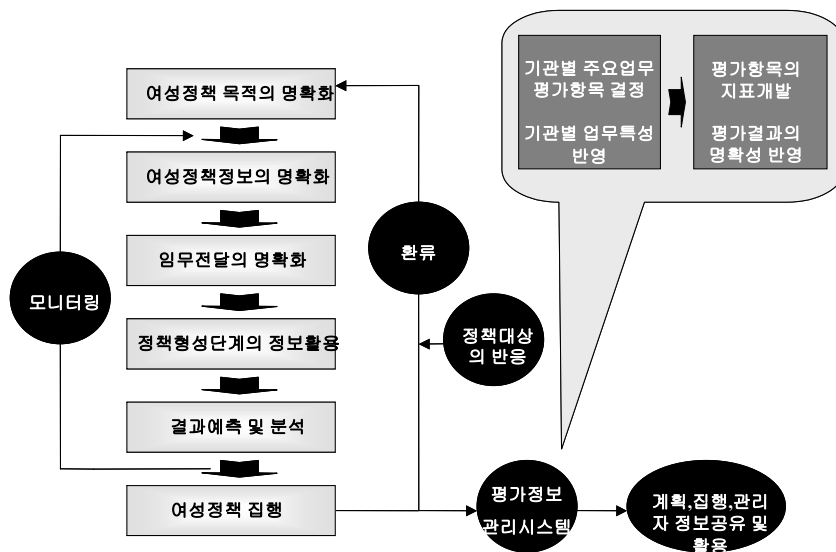


네트워크의 각 주체는 정보의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정보의 활용자로서의 역할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각 주체 간의 정보의 통로는 기존의 정부고속망과 지방행정고속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여성정책 담당자는 해당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정책정보의 분류를 통하여 임무를 세분화하고 임무의 전달과정을 분명히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형성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네트워크 안에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

고 관련 정보를 환류시켜 그 결과를 다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별도의 평가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림 5-4]와 같다.

[그림 5-4] 여성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



여성정책 평가정보 관리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정책평가정보를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간, 기관간에 공동 활용하는 데 있다. 특히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여성정책 평가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여성정책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방안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시스템 개발방안을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1. 법·제도적 기반 마련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추진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여성정책의 업무영역을 구체화하고, 여성정책부서는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여성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적을 매년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여성부로 보고하는 추진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여성정책 담당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업무연계를 통한 협조체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부서간의 연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시스템의 초기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지원과 내부 방침이 필요하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할 사항으로서 “여성정책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여성정책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담당자들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회의 및 세미나를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인식시키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하며, 협조공문 등을 통해

자료입력 등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법·제도적인 정비 및 개선을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 정보보호, 연계협력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고려사항
 - 단일창구를 통한 정보 제공
 - 정보관리 및 활용단계의 최소화
- 정보보호를 위한 고려사항
 -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 강화
 - 정보보호 정책/지침 수립
 - 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역할 부여
-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 각종 코드, 메타데이터, 전산망 연계 등을 표준화
 - 관련 기관간 정보연계 및 업무협의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 정보의 연계 또는 통합에 대한 기관별 역할 분담

2. 여성정책정보의 명확화

일반적으로 정보화는 공급측면의 정보자원 관리와 수요측면의 정보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즉 정보화는 쌍방향적인 상호작용 하에 발전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를 여성정책과 연관시켜, 여성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하는 여성정책정보의 공급측면과, 공급된 정보를 수요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하는 수요측면을 고려하였다. 즉, 이러한 상호작용 하에 여성정책 관련 제반 지식 및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여성정책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여성정책 정보화로 정의하였다.

여성정책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라는 개념이 지식과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를 정책경험, 성공적인 경험과 사례,

기술 등 개인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여성정책정보는 각 부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시간 정책정보, 지역통계, 수행사업의 성공과 실패사례,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예산정보, 지역특화사업정보, 정책관련 보고서 등이었다.

여성정책정보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관련 정보로서, 여성부와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업무추진계획 등 각종 문서(전자문서 포함), 예산·결산·기금정보, 업무경험지식, 사례, 각종 통계 등의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다.

3. 여성정책업무의 표준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연도별 실적보고체계를 보면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실행계획과 실적은 그 기재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정책수행 방법이 다양하여 계획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없고, 초보적인 평가도 하기가 어렵다(여성부, 2001c: 120).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업무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여성정책업무에 대한 표준분류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 신고, 제출 방식의 전자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통업무 처리절차가 간소화, 표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통양식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 코드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표준분류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와 정보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분류체계는 여성정책의 영역을 범주화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과제들을 망라적으로 조사하여 유형화, 세분화 하는 것이다.

여성정책업무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실적보고시스템이다. 이는 그동안 기관별로 정책 수행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보고된 내용이 목표대비 추진실적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분야별 보고양식을 표준

화하여야 한다. 보고내용의 기재항목을 세분화하고 규격화하고, 영역별, 과제별, 추진기관별 코드를 표준화함으로써, 연도별 추진실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타기관과의 실적 비교도 가능하도록 한다. 추진기관 코딩을 통해 추진주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실시간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여성정책 업무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의 실시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은 첫째, 정책관련 정보를 담당자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둘째, 자료를 취합하고 수집하는 데 효율적이어야 한다.

우선 정보를 담당자간에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료공유방을 운영하여 담당자들이 자료를 쉽게 올리고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사용한 자료에 대한 평가를 점수화하면 시스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업무담당자의 이력사항을 관리하여 담당자가 바뀌어도 전임자의 이력이 남아있는 담당자 히스토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한다. 둘째, 담당자간의 정보교류채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주요 정책별로 게시판을 개설하여 자료나 공지사항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카페와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의 연락처나 E-mail을 등록하게 하여 담당자간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시스템은 자료를 취합하고 수집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업무관련 지식, 사업계획 및 보고서 등의 문서, 참고정보 등이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전자문서에 대한 민간 공개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성부도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 8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개설하였다. 정보공개방을 통하여 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정보-주요 결재문서, 보고서, 기관 운영자료 등-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시 인터넷자료 자동검색 수집 프로그램인 웹-로봇을 통하여 각 부처에서 공개하는 여성정책 관련 전자문서를 자동 수집하여 축적해 놓는 방안을 고려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자료나 기관의 실적보고를 DB화해 놓음으로써 여성정책관련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DB개발을 위해서는 업무분석 및 DB설계 등을 위해 업무담당자와 산전문가 간의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

5.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 확충

여성정책시스템 구축은 여성부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자를 연결하는 여성정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놓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교류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적으로 충분한 명분이 있다.

정보화를 위한 정부예산은 일반예산과 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성부에서 추진할 경우 일반회계예산, 정보화추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 중 일반회계예산과 정보화추진기금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회계예산에서 재원이 확충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소요예산 파악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여성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예산요구
-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및 예산(안) 확정
- 예산(안) 국회 이송
- 국회 여성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국회 예산 결산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국회 본회의 의결
- 예산 확정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재원이 확충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소요예산 파악
-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여성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정보화촉진기금 요구
- 한국전산원 사업심의 및 검토
- 정보통신부 사업심의 및 검토
- 기금확정

일반회계나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단계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포함되어야 지원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여성부에서 작성한 ISP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2003. 9)에는 “정책형성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전문가를 포함한 파트너십 형성을 목적으로 여성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정책 실현에 대한 평가를 모니터링하는 채널을 확립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우선과제로서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한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통신부 예산을 한국전산원이 집행하고 있다. 여성분야를 전담하는 한국전산원 직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확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의 구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및 조직이 필요하다. 운영인력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전반에 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CIO(정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기술 인력의 임무는 시스템 사용자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자료 백업, 시스템 가동 및 정지 등의 운용,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 연동작업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시스템 유지보수성 개발 작업 등을 한다. 개발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비상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버는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여성부에 두고 운용함이 바람직하며, 자료관리 및 보안, 해킹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여성정책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여성부에 시스템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스템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관간의 정보연계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가칭: 여성정책정보공동이용기관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위원장, 간사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구성원은 각 기관의 여성정책관련 책임자로 구성하며 각 기관의 정보화 담당자의 공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협의회는 주요 기능으로는 시스템 중장기계획에 관한 협의 및 의결, 평가 및 결과보고, 그리고 정기적인 의견수렴 및 운용결과보고 등이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도록 촉구하고 연찬회, 세미나 등을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평가체계 확립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환류시켜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도 형식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 이행 평가가 없는 단순한 실적의 취합에 기인한다.

여성정책 평가를 위한 근거규정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과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제 구체적인 평가체계, 분야별 평가틀, 세부 평가지표 등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체계 확립과 함께 여성정책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평가정보 관리시스템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성정책 평가정보 관리시스템은 여성부와 관련 부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중앙의 통합 DB관리시스템이다.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정책평가정보를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간, 기관간에 공동 활용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시스템을 통해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행에 대한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는 여성발전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예산 지원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VI

.....

결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여성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분야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성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보화 추진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보기술을 여성정책 추진의 핵심 툴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식정보화의 기반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환류시켜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정보 관리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성정책은 중앙의 여성부를 중심으로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정책 목표로 하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근간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제시되고 있다. 원활한 협조체계는 동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특히 중요한 전략이다.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실적 보고, 이행 평가가 없는 단순한 실적의 취합, 그리고 타 기관 뿐 아니라 동일기관에서도 연도별 실적 비교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제2차 기본계획은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하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 정보관리의 필요성과 정보시스템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관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조직의 정보운영 실태 및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보화는 공급측면의 정보자원 관리와 수요측면의 정보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즉 정보화는 쌍방향적인 상호작용 하에 발전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여성정책 정보화를 ‘여성정책관련 욕구의 정보화’, ‘여성대상 서비스의 정보화’, ‘여성정책 자원의 정보화’, ‘여성관련 지식의 정보화’, ‘여성대상 행정관리의 정보화’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여성정책 정보화를 통하여 여성정책관련 기관의 업무가 표준화되면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고 대국민 서비스도 제고될 것이다.

현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위한 전략적 핵심 수단으로서 전자정부 구현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stove-pipe 구조이다. 즉,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나 관련 부서들의 업무가 단절되어 있는 연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호 연결된 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정보의 공유와 통합의 저해요인이 된다. 즉,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이 분산되어 있거나 문서상의 기록으로 되어 있어 이를 공유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정책집행에서의 stove-pipe 구조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의 구축방향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이끌어가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계획과 관리, 평가체제 정립 등은 여성정책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지식관리라는 개념은 지식경영이라는 개념으로 민간부문에서 먼저 도입된 것이다.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은 조직 내·외부의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조직구성원이나 조직 전체 차원의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이 내·외부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측면이 현재의 KMS와 유사하다.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지식의 공동활용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KMS의 지식경영기법을 여성정책정보에 적용해 보았다.

특히 노동부와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사례를 참고하였다. 농림 KMS의 활성화 방안 중에서는, 지자체 농정담당 공무원들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위해 지자체 농정공무원에게 KMS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관련 업무지원 코너 신설 등이 들어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업

무의 지식공유를 유도하고 특히 지자체와의 연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국 도·시·군과도 연동하려는 계획은 여성정책의 유기적 협조체계구축을 위하여 벤치마킹의 대상이라 생각된다.

노동부의 경우는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또한 인센티브 없이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기에 한계가 있을 것임이 명백하다. 별도의 법·제도적인 강제성이나 금전적, 물질적인 포상 및 정신적 보상의 측면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내실 있는 지식관리체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외국의 사례로서 호주의 여성정책네트워크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축, 정부·비정부 조직간의 네트워크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과 지방조직의 여성정보활용 현황, 여성정책정보 운영실태, 정책담당자들의 여성정책통합네트워크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정책담당자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여성부와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 책임자와 지식정보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여성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 등에 관하여 심층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여성정책담당자는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찾느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지방의 여성정책담당자들이 정보의 부족을 상대적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 전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업무 수행결과가 새로운 정책형성이나 집행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그들이 여성정책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도 크다 하겠다. 그들이 제시한 활용가능성을 정리해 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첫째,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부처별, 기관별로 실시간 평가가 가능할 것, 둘째, 각 행정기관간의 의견수렴의 창구 역할을 할 것, 셋째, 지방의 여성정책 동향 파악이 가능할 것, 넷째, 체계적인 정보수집시스템으로서 기능할 것, 다섯째, 공무원간 네트워크화가 가능할 것 등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승진이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이

라고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 등을 기대하였다.

설문조사, 면접조사, 사례연구 등의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정책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하는 방향 모색이라 하겠다. 시스템의 개발 전략으로서는 우선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및 재원을 투입(Input)함으로써 관리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과 관련된 조직과 담당자들의 정책집행에 대한 산출물(Output), 즉 연구·사업의 결과물, 생산된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을 통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Impact)을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별 성과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정책 평가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여성정책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발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부서간의 연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정책정보의 영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스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정책정보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관련 정보로서, 여성부와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업무추진계획 등 각종 문서(전자문서 포함), 예산·결산·기금정보, 업무경험지식, 사례, 각종 통계 등의 유형을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여성정책 업무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여성정책업무에 대한 표준분류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신청, 신고, 제출 방식의 전자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통업무 처리절차가 간소화, 표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통양식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 코드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

넷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은 정책관련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담당자간에 공유하도록 하면서, 자료를 취합하고 수집하는 데 효율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 여성부에서 추진할 경우 일반회계예산, 정보화촉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중 일반회계예산과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회계나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단계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포함되어야 지원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ISP의 우선과제로서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한다.

여섯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및 조직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여성부에 시스템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스템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관간의 정보연계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가칭: 여성정책정보공동이용기관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여성정책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성정책 평가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환류시키는 전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 고현진·전은석(1999), “광역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광역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개발”, 『韓國地域情報化學會誌』 3권, 1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pp.267-287.
- 권영상 (2002),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공정위의 거래 종합지식경영시스템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행정학).
- 김선기(1997),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수원 :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김용채(2001), “우정사업 ERP시스템 구축계획”, 『우정정보』, 통권 46호, pp. 1-16.
- 김원홍(1997),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명승환(2001), “전자정부에서 합리적 정책결정 및 정보시스템의 한계와 지식기반 행정의 가능성”, 『정보화정책』, 8권, 3호, (한국전산원), pp.9-23.
- 목진휴 최영훈 명승환(1998), “정보기술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주요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권, 3호, (한국행정학회), pp. 35-54.
- 문신용(2000), 『행정정보화와 조직운영의 혁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박영기(1994), 『정책정보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_____(1995), “정책정보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 : 대외통상정책정보시스템모형을 중심으로”, 『KIPA 研究報告』, (한국행정연구원), pp.94-11.
- 박재희(2000), 『정책결정시스템 개선방안: 정책조정체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_____(2001), 『정책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배응환(2001),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 탐색”, 『한국행정연구』, 10권, 3호, (한국행정연구원), pp.258~298.
- 안문석(1990), “지방정부의 정책정보체제 설계방향”, 『한국행정학보』, 24권 1호, (한국행정연구원), pp.117-141.
- 어윤양, 김하균, 이재정(2000), “Data Warehouse 기법을 이용한 수산정책정보시

- 스텝 구축”, 『수산경영론집』, 제31권 제2호, (한국수산경영학회), pp.119-132.
- 여성부(2002),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_____(2001a), 『여성정보화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 연구』.
- _____(2001b), 『정부 부처 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_____(2001c),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_____(2001d), 『여성정책책임관(GEO) 제도에 관한 연구』.
- 오정숙(2001), “정보통신산업동향: 소프트웨어”, ERP, pp.23-36.
- 오철호(1998),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사용에 대한 합리모형 비판”, 『한국정책학회보』, 7권, 2호, (한국정책학회), pp.195-228.
- 우정사업본부(2003), 『우정사업경영합리화계획 2003-2005』.
- 정윤수(2001), “공공부문 지식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정보화정책』, 8권, 4호, (한국전산원), pp.7-25.
- 주재현, 한승준, 안연정(2001),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기구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방안”, 『정책자료』, 2권, (여성부 정책총괄과).
- 崔洙滿(1998), 『광역자치정부의 최고정책결정자정보시스템(PEIS)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행정학).
- 하미승(2001), “정부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확충방안”, 『사회과학논총』, 제25집, (건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pp.179-201.
- 한국전산원(1996),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보고서.
- _____(2001), 『우리나라 여성정보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한세익(1998), “이음새 없는 행정: 정책연계성에 대한 고찰과 실천적 적용가능성”, 『한국행정학보』, 32권, 3호, (한국행정학회), pp.17-33.
- _____(2001),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이해와 접근: 행정정보시스템의 진화가능성 모색”, 『한국행정연구』, 10권, 2호, (한국행정연구원), pp.228-259.
- 행정자치부(2002),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 _____(2002), 『여성과 공직 2002』.

황성돈(2002), 『전자정부의 이해』, 서울 : 다산출판사.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http://www.aspanet.org/solutions/egov.html>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1997), "Partner in State-Local Information System: Lessons from the Field", *University at Albany, SUNY*.

_____(2001), "Untangle the Web: Delivering Municipal Services Through the Internet", *University at Albany, SUNY*.

Cresswell, Anthoy M. and Theresa A. Pardo(2002), "Implications of Legal and Organizational Issues for Urban 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18, pp.269-278.

Executive Office of President(2003), "E-government Strategy".

Forgionne, G. A., Frager, Y. S.(1998), "Dynamic public policy making through decision support systems",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Vol. 32, Issue 3, p.239.

Ho, Alfred Tat-Kei(2002), "Reinventing Local Governments and the E-government Initiative", *PAR*, Vol. 62, Issue 4, p.434-444.

NPR(1993), *"From Red Tape to Results: Creating a Government that Works Better and Costs Les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2002), "E-Government Strateg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MB*.

Relyea, Harold C.(2002), "E-gov: introduction and overview",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19, pp.9-35.

The Working Group on E-Government in the Developing World(2002), "Roadmap for E-Government in the Developing World", *Pacific Council on International Policy*.

Wenbo Shi(2002), "PUBLIC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AND INFORMATIO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25, Issue 5, pp589-.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2001), “Global E-Government Survey”,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USA.



부 록

부록 1. 16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제 현황	147
부록 2.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설문지	161

부록 1. 16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제 현황

서울특별시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1. 양성평등 기반 및 문화확산 1) 주요시책사업의 성인지적평가 2) 양성평등의식함양을 위한 여성학 강좌 3) 양성평등화 문화 사업 추진 2. 남녀차별 관행개선 1)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2)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강화 3.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 1) 위원회 여성참고제고 등 시정참여기회 확대 2) 관리직 확대 및 다양한 직무순환보직 3) 출산휴가·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활성화 4. 여성단체지원 및 여성지도자 육성 1) 여성단체 육성 및 파트너쉽 강화 2)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3) 여성포털사이트 구축 및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지원	1. 여성인력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1)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2) 여성인력개발센터 특화사업 추진 3) (재)서울여성 운영 활성화 4) 영성CEO·국제관계·IT·전문가 양성교육 5) 실버계층 전문일자리 창출등 경제자립 지원 2. 여성창업지원 기반구축 1) 여성지원 창업보육센터 육성 2) 여성기업박람회 개최 등 여성기업 상품판로 지원
3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1. 여성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2) 성매매예방 및 탈매춘 선도재활지원 3) 무의탁 여성보호시설 운영내실화 4)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5) 건강한 가족문화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2. 10대 가출·성매매 선도재활사업 1) 심야 길거리 상담 운영강화 2)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 “테마여행” 3) 가출·성매매 청소년 예방 및 선도재활 강화 3.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1) 성폭력 여성장애인 보호·상담시설 운영 2)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및 소자본 창업지원 3)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4. 여성건강 의료서비스 향상 1) 영유아 보호·출산여성 등 모자보건사업
4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1. 공교육 기반 구축 1) 보육사업 자원자금 조성운영 2) 보육시설 확충 및 종교시설 보육참여 활성화 2. 맞춤형 보육확대 및 보육서비스수준향상 1) 영아·장애아 전담, 시간 연장, 방과후 보육의 확충 2)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3)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5	아동복지증진과 안전향상	1. 아동복지의 증진 1)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2) 민간단체참여의 결식아동지원 확대 3) 학대아동 보호체계 확립 2. 어린이 안전의식 향상 및 환경개선 1) 어린이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시설 개선 2)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운영

부산광역시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업계획
1	여성정책의 내실 추진	1. 여성발전 기반 구축 2. 여성정책 발전 및 홍보
2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1. 양성평등 촉진 2.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3	모·부자가정 복지증진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확대 2. 모자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4	여성권익증진사업 활성화	1. 상담서비스 활성화 2. 폭력방지 사업 재실 추진 3.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보호
5	아동복지 증진	1. 보육서비스 향상 2. 특수보육사업의 강화 3.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4. 아동복지시설 내실 운영 5.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강화 6. 아동복지시설 개방 확대 7. 아동 그룹 홈사업 8.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9. 무료 급식아동 지원 10. 불우이웃 결연사업 11. 아동학대 방지사업

인 천 광 역 시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양성평등의 촉진	1. 공공기관의 성희롱 종합예방 대책의 촉진 2. 남녀차별 신고 센터 운영이 내실화 3. 양성평등의식의 정착 여건 조성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2. 인천여성인재은행의 운영 3.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여성중심의 정책개발 및 홍보 강화	1.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2. 여성정책 관련 공무원 역할 제고 3. 여성정책 홍보 강화
4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지원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 기준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산업 3. 여성발전기금(모자복지) 지원 산업 4. 저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운영 5. 모자복지 상담사업 6. 모자보호시설 운영 7.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8. 여성복지시설 직무능력 향상 교육 9. 모자복지 세미나 개최
		1.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2. 동시통역시스템 운영

5	여성 권익증진사업 지원	3. 『긴급피난처』 지정·운영 4.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5. 성매매 예방 및 여성복지 상담 6.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7.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8. 통합운영상담소 운영 9.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10. 무료법률구조사업
6	여성단체활동 지원 활성화	1. 『제8기 여성자치학교』운영 2. 제6회 인천여성대회 개최 3.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캠프 운영 4. 여성단체 테마교육 지원사업 5.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 6. 중국자매도시 여성단체와의 국제교류 7.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육성 8. 여성단체활동 모범의회 표창 9. 여성단체활동 관련 군·구 협조사항
7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의 활성화	1. 여성사회교육 운영지원 2.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8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	1. 보육시설 확충사업 2. 저소득층 아동보육 지원 3.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4.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 5.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 6. 보육정보센터 운영

대구광역시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실질적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1. 여성정책위원회를 통한 양성평등 정책 개발 2. 정책과 제도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3.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4. 대구지역 여성전문인명록 발간 5.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6.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7. 5대 생활문화개선운동 추진 8.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

2	여성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1. 여성IT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 2. IT산업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3.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활성화 4. 수요자 중심의 여성사회교육 5.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6.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활용 7. 여성정보체계의 확대 구축 8. 여성문화활동 지원으로 사회참여 촉진 9.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1. 제8회 여성주간 운영 및 지원 2.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3.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공모·지원 4. 대구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육성 5. 여성단체활동 관련 구·군 협조사항
4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보호와 복지서비스 확대	1.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책 추진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교육·홍보 강화 3.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 4. 『여성1366』종합상담서비스 제공 5.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 New-Life회복교육 7.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8. 가폭,성폭,성매매관련시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5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능력 배양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2.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 3.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기금 운용 4. 모자보호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6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의 건전육성	1. 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위한 지원확대 2. 만 5세아동 무상보육 지원확대 3.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4. 아동복지시설 보호수준 향상 5. 직장내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6.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운영 7.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보호 8. 학대아동 예방대책 9.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광주광역시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공직자 양성평등 의식 제고	1.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과목 운영 2.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3. 직장내 성희롱 예방 예규제정 4. 직장내 성희롱 상담창구 운영 5.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은행 운영 6. 양성평등 시민 교육 7.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배부 8. 평등 모범부부 발굴·시상 9. 5대 생활문화 개선운동 추진
2	관리 대상위원회 여성참여 제고	1. 관리대상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2. 제4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3	민간 국제활동지원 (여대생)	
4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 지원	1.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캠프 2. 여성정책 토론회 3. 여성단체 등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4.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5. 여성주간 운영 6. 여성의 지식재산권 설명회
5	2003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1. 2003년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2.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6	여성발전 기금 조성 및 운용	
7	여성취업·창업 박람회 개최	

대전광역시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1. 여성정책위원회 기능강화
2	여성문화회관 건립	
3	2003여성 신직업 페스티벌 개최	1. 연구소 및 벤처기업 등 유치 2. 여학생 백일장 운영
4	보호가 필요한 여성 지원강화	1. 저소득 모·보자가정 보호강화 2.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

5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 사업 강화	1. 시설아동 보호수준 향상 2. 가정결손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강화 3.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 내실화
6	여성회관 운영	1. 시대에 걸 맞는 여성사회 교육 2. 상담 및 건전가정 육성 프로그램 운영 3.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교류 4.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회관 조성

울산광역시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저소득 여성 보호	1. 편부모 가정 자립기반 지원 2. 요보호여성 시설보호
2	여성상담 및 선도	1. 위기 및 긴급상황에 처한 여성 보호체계 구축 2. 전문상담소 운영
3	여성발전기금 운용	1. 남녀평등 촉진 및 유능한 여성 인력 육성 2.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 복지 증진 사업 지원
4	남녀평등 및 여성참여 확대	
5	여성주간 행사 추진	1. 남녀평등 의식제고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 2. 여성의 역량을 결집하고 자긍심 고취
6	여성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	1. 여성자원 봉사 주간 운영 2. 여성자원봉사자 발굴 및 자원봉사 활동 강화 3. 여성자원 봉사 센터 운영지도
7	여성 사회교육기관 운영	1. 여성회관 운영 2.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 가족문화센터 운영
8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9	성·가정폭력 교육시설 교육비 지원	
10	아동보호사업 전개	1. 어린이날 기념 행사 2.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운영 3.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지원 4. 학령전 시설아동 및 학대아동 석식비 지원 5. 미취학아동 중·석식 및 취학아동 석식비 지원 6. 결연기관 운영 지원

11	소년·소녀 가정 및 시설아동의 건전육성	1.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2. 시설아동 보호 및 기능 보강사업추진 3.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운영
12	공립·법인보육시설 특수보육시설로 전환	1. 공립보육시설 중 노후시설은 신축, 법인보육시설은 증축하여 특수보육시설로 전환

경 기 도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	1. 경기발전 5개년 시행계획 수립 2. 경기여성통계 조사연구 3.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 4.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5. 여성발전기금 지원 6. 여성자원활동 지원 7. 가칭)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2	여성지도자 육성 및 양성 평등 의식 제고	1. 경기 여성 지도자 과정 운영 2. 차세대 여성지도자 운영 3. 여성 동아리 학습프로그램 운영 4. 역사적 여성 인물 재조명 5.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 제고 6.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활성화 7. 도민이 함께 하는 여성주간 운영 8. 공무원, 도의원 등 성인 지력 향상 교육
3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1. 피해 여성 상담 및 보호기능 강화 2.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 3. 저소득가정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
4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 개발 및 지원	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내실화 2.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3. 여성취업활당제 시행 4. 경기여성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추진 5. 직업 및 기술교육 6. 교육이수 학점은행제 및 인증제 시행 7. 여성비즈니스 종합지원 기반구축 8. 여성 IC·CT 전문교육과정 운영 9. 여성취업전문센터 건립
		1.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위원회 여성·복지분과 위원회 운영

5	여성정책 발전기반 구축	2. 북부지역 장점을 활용한 중점 사업 발굴 추진 3. 여성분야 활동 인사와 전문가 및 민간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및 현장대화 실시 4. 여성활용공간 확충을 위한 1시·군 1여성회관 확충 지속 추진
6	여성인권 행사 및 여성폭력 예방	1. 성·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기능 활성화로 여성인권 향상과 사회복귀 지원
7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	1. 저소득계층 기본생활권 보장과 자활·자립 기반 조성 2.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및 윤리관 교육 실시 3. 푸드뱅크사업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8	통일시대 대비 여성의 역량강화	1. 분단현장 방문 및 전문가의 강연
9	여성의 평생교육	1.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여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실시 2.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중·장년 여성들에게 양질의 사회교육 실시

강원도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여성정책 홍보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	『여성정책 홍보책자』 제작 『제8회 여성주간 행사』운영 제8회 강원여성대회 개최 『부부문패 달기 운동』전개 『주부명함갓기 운동』전개
2	공직자 양성평등의식 제고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여성발전기금』확대 조성

충청남도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	1. 여성의 사회교육 강화 2. 『지역여성 평생교육 협의체』 구성·운영 3. 여성자원활동 지원 강화 4. 여성전체의 적극적인 활동지원 5.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6. 『1일 명예여성정책관제』 시행

2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의 주류화	1. 『생활속의 평등문화운동』 전개 2. 명예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 3.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여건조성
3	여성복지 서비스의 확충과 보호·지원강화	1. 저소득 『한부모한가정』 생활안정 지원 2. 여성복지 공공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3.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과 복지증진 4. 성 바로알기 릴레이 교육 현시

전라북도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여성정책 추진기구간 연계 강화	1.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2.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3.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실시 4. 공공부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1.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지원 2. 차세대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여대생캠프 운영 3.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지도자 리 더쉽향상 교육 실시
3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 결정 참여 확대	1.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2.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3.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실시 4. 공공부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 고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2. 차세대 여성 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여대생캠프 운영 3. 여성의 정치적 역할 강화를 위한 여성지도자 리 더쉽향상 교육 실시
5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1. 여성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운영 2. 취업박람회 개최
6	여성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1.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실시 2. 여성자원활동사례 수기 공모
7	여성자원봉사자 인정 격려	1. 여성자원활동 유공자 포상 2. 여성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전라남도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성역할 강화	1. 여성단체와 연계한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 2. 민박경영 여성 등을 대상으로 IT접근 교육 3. 여성에 대한 경제 마인드 제고교육 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강화
2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1. 여성의 리더쉽 향상 교육 2. 『전라남도 여성개발센터』 건립 추진 3. 여성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지속적인 보육시설 확충과 개선 2.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확대
4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의 대표성 강화	1.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2.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 3. 전남여성사 발간
5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1. 남녀 공동참여 마을만들기 추진 2. 여성자원봉사 활동 및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3.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6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 2. 가정·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3. 외국인 주부를 위한 부부공동체 교육

경상북도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1. 자치단체장 및 간부공무원 관심제고 2. 부진위원회 특별관리 3. 간부회의 등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 등 특별대책 추진 4. 경북여성인명록 및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인명록 적극 활용 5. 법령, 조례개정 건의 등을 통한 위촉대상위원 자격기준 완화
2	『여성발전기금』조성	1. 지식기반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정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별로 적정 기금을 확보 조치
3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추진	1. 『여성공무원 도전입찰당제』시행 2. 간부공무원 여성임용 확대 3. 여성공무원 복지증진

4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 조사연구사업 2. 교육사업 3. 여성정책토론회 4.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이용 자료제공
5	도청 어린이집 운영	1.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지도 2. 보육대상 아동 부족시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지도
6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7	제8회 여성주간 내실 운영	1. 기념 사업 실시
9	공무원 여성평등의식 제고	1. 『남녀평등의식과정』 설치·운영
10	여성정책 종합평가 대비 철저	1. 행정자치부 주관 여성정책 평가에 대비하여 여성 공무원 인사운영, 각종 여성정책 추진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전 대책강구

경상남도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2	정책결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여성의 공공부문 정책결정 참여 확대 2. 여성공무원이 체계적 육성·관리 3.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 4.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의 체계화·전문화 5. 여성 모니터링 활동 강화
3	여성 인적 자원의 개발과 전문화	1. 여성인력의 정보체계 구축 2. 여성의 진로지도 및 직업능력 개발 3.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4. 여성 평생교육 활성화 5. 여성전문인력 및 강사요원 육성 6. 여성 정보화교육의 체계화·전문화
4	여성의 고용촉진과 경제활동 활성화	1.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 2. 취업알선기능 강화 3. 모성보호 강화 4. 빈곤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5. 여성 경제인 지원 강화

		6. 여성 농업인의 전문성강화 7.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능력 개발 8. 여성노인의 취업알선 강화
5	보육 시설 및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 질 높은 보육기반 구축 2.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정 확대 3.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4. 방과후, 야간보육, 휴일보육 사업의 확충 5.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6.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자질향상 7. 효율적인 보육행정의 구축
6	여성의 건강과 복지 증진	1. 건강 증진 및 관리 2.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립 지원 3. 여성 노인 복지 서비스 강화 4.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5. 여성 근로자 복지 강화
7	여성의 인권 보호 강화	1. 여성 폭력 발생과 성매매 예방 및 대책 2. 위기 여성의 보호시설 운영 활성화 3. 미혼모 발생 예방 및 대책

제주도		
번호	2003년 여성정책과제	사 업 계 획
1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2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화 활용	1. 전업주부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2. 여성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3. 여성교육기관의 차별화·특성화 4. 성공한 제주출신 여성 초청강연
3	여성의 경제적 자립 증진 강화	1.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선진인프라 조성 2.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3.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보육받는 사회
4	사회·문화 분야 여성 참여 확대	1.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 2.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3. 여성정책 추진 과정에 여성단체 참여 확대 4. 여성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5. 여성자원봉사자 인정·격려 6.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5	환경·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1. 여성 해외연수기회 확대 2. 여성단체간 국제교류 활성화 3. 전국여성대회 및 세계여성지도자대회 등 유치
6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1.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강화
7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1. 성매매 예방 및 인식의 제고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4.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화
8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및 의식확산	1. 가정내 문제 종합적인 체계마련 2.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홍보의 체계화 3.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추진
9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여성 정체성 확립	1. 제주여성 천년사의 체계적 정립 2. 제주여성 역사전시관 조성 3. 제주여성플라자 건립

부록 2.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정책정보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전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조직의 정보인프라 현황파악을 내용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외부에 공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연구가 우리나라 여성정책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 7

연구책임자 : 백영주(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혜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조사문의 : (전화) 02-3156-7161, 02-3156-7162

(팩스) 02-3156-7277

(e-mail) yjpaik@kwdi.re.kr

ckyurie@kwdi.re.kr

(주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정보협력연구부 211호 (우)122-707

I. 여성정책 업무내용

1. 소속기관명 : _____

2.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관련 사업명을 모두 적어 주시고, 각 사업별로 업무수행이나 업무보고 등과 관련한 유관기관명도 적어 주십시오.

번호	담당 여성정책 사업	사업관련 유관기관

II. 여성정책업무 수행환경

3. 여성정책업무에 관한 기획(안)은 상급자에게 제출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까?

- ☐ ① 선행업무의 진행방식과 결과를 참고하여 기획(안) 작성
☐ ② 담당자 개인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기획(안) 작성
☐ ③ 동료직원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획(안) 작성
☐ ④ 상급자의 지시를 토대로 기획(안) 작성
☐ ⑤ 기타()

4.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담당자의 기획(안)을 상급자에게 제출 후 결정되기까지 대개 몇 번의 수정이 이루어집니까?

- ☐ ① 대개 수정 없이 진행 된다 ☐ ② 한 번 ☐ ③ 두 번
☐ ④ 세 번 이상

7-1-2. 업무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에서 제시된 의견을 담당업무에 반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___ ① 있다

___ ② 없다

8. 귀하는 여성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느 곳에서 얻고 있습
니까? (우선순위별로 2개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 ① 온라인상의 정보

___ ②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이나 상급자의 조언

___ ③ 공문서 기록

___ ④ 업무관련 간행물(연구사업보고서, 교육자료 등)

___ ⑤ 기타()

[‘① 온라인상의 정보’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1.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한다면, 주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
까? (우선순위별로 3개만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___ ① 소속기관 웹 사이트

___ ② (타)중앙행정기관 웹 사이트

___ ③ (타)지방자치단체 웹 사이트

___ ④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연구기관 웹 사이트

___ ⑤ 시·군·구 시스템

___ ⑥ 기타()

8-2. 귀하는 여성관련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자주 인터넷
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___ ① 매일

___ ② 주3회

___ ③ 주1회

___ ④ 한달에 1-2회

___ ⑤ 한 달 이상

[‘① 온라인상의 정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3.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부실하다
 ___ ②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___ ③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___ ④ 기타()

III. 여성정책 통합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

9. 여성정책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3개만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___ ① 여성정책관련 행정기관간의 정보교류의 어려움
 ___ ② 여성정책의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___ ③ 인력 또는 재원의 부족
 ___ ④ 획일적 업무처리
 ___ ⑤ 특별히 없다
 ___ ⑥ 기타()

10.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행정기관과 정보의 공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___ ② 그렇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그렇지 않다 ___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1. 귀하가 수행한 여성정책업무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___ ① 업무수행결과는 보고 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___ ② 업무수행결과는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만 일정시일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 ___ ③ 업무수행결과는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DB화되어 언제라도 필요하면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 ___ ④ 잘 모르겠다

12. 다음은 여성정책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정보자원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정보
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해당번호 위에 ○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필요하다	그저그렇다	전혀 필요하지않다
1) 문서(사업계획 및 보고서, 회의록 등)	1	2	3 4 5
2) 간행물(연구보고서, 교육자료, 소식지 등)	1	2	3 4 5
3) 동향정보(여성정책현황, 여성계소식 등)	1	2	3 4 5
4) 참고정보(여성통계, 인명 및 기관정보 등)	1	2	3 4 5
5) 사업진행에 필요한 공문양식	1	2	3 4 5
6) 업무수행중 체득한 업무관련 지식	1	2	3 4 5
7) 기타 ()	1	2	3 4 5

1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제
반 정보자원 및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국가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그렇다 ___ ② 그렇다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그렇지 않다 ___ 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매우 그렇다’와 ‘② 그렇다’에 응답하신 경우에만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여성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귀하는 어느 부문에서 가장 도움을 받
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___ ① 업무관련 정보의 교류 ___ ② 업무관련 자료수집
- ___ ③ 업무진행관련 협조 ___ ④ 업무수행 보고 및 평가
- ___ ⑤ 업무결과의 홍보 및 정보화

14. 다음은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____ ① 여성 ____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____ ① 고졸 ____ ② 전문대졸 ____ ③ 대학졸 ____ ④ 대학원졸

♠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 연구보고서 260-8

여성정책정보 전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2003년 12월 27일 인쇄

200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대)

<정가 5,000원>

ISBN 89-8491-076-7 93330